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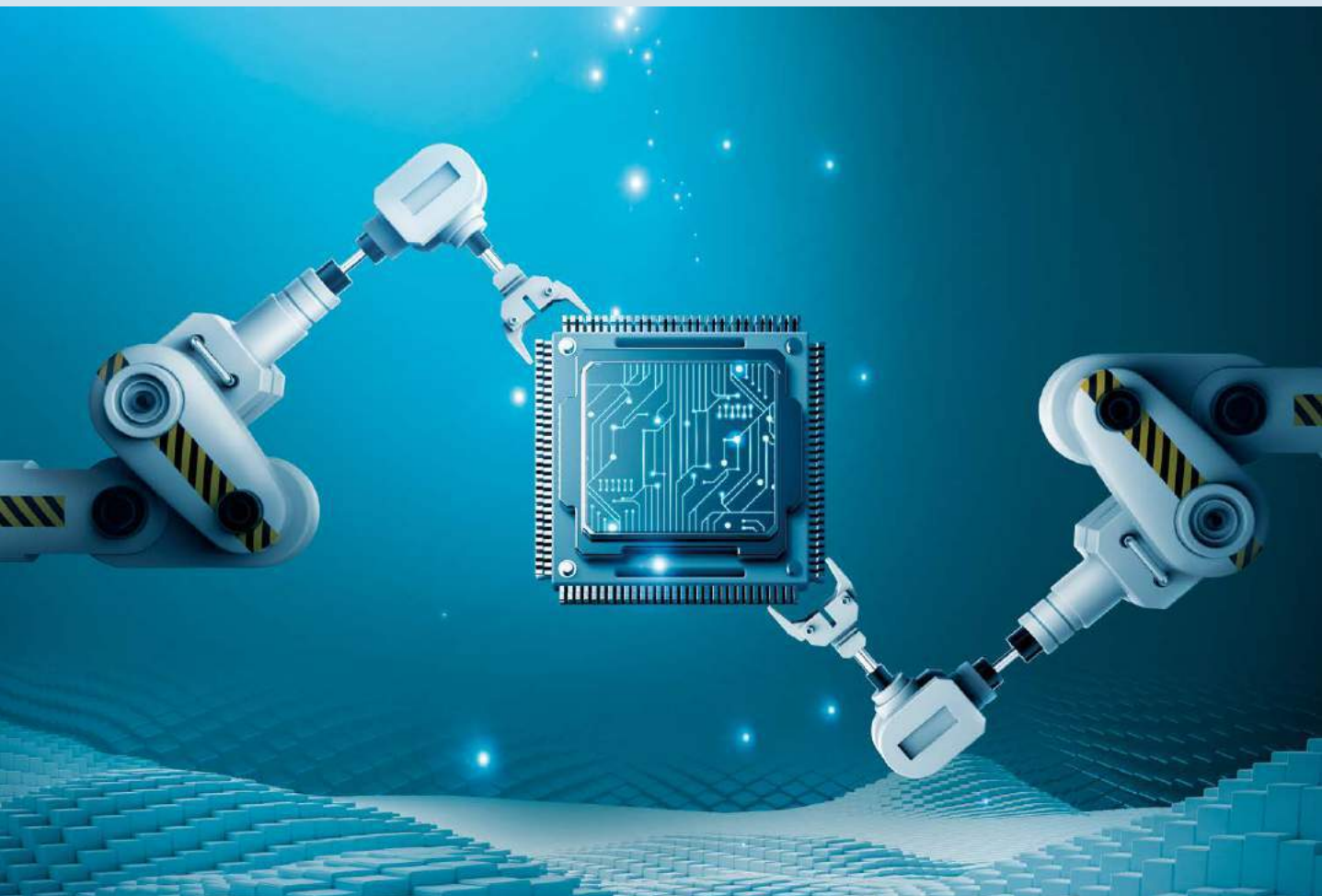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2020. February
Vol. 38

2



재정 INSIGHT

KPFI 인사이트
재정칼럼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 Talk Talk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재정 캘린더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February, 2020
VOL. 38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273-05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분석기획부 | 02-6908-8593
제작 경성문화사 | 02-786-2999

재정 INSIGHT

04 · KPFIS 인사이드

- 유아교육 재정현황과 국제비교
나원희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국고보조금 업무 간소화
e나라도움과 공공·민간 ERP 간 연계 지원
김동주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
장진호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

20 · 재정칼럼

- 혁신성장과 국가재정의 역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정이 혁신경제를 추동할 조건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8 · 톺아보기

- 정부 R&D 예산과 혁신성장



재정 NOW

- 30** •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 36** •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 42** • 키워드 재정
인구
- 46** • 해외재정동향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재정 STORY

- 52** • 이달의 재정 이야기
· 생활SOC 복합화 사업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60** • 재정 Talk Talk
정부가 가진 재산은 무엇인가요?
- 62** • 미술관에 간 경제학자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과 결혼경제학
- 66** • 위대한 경제학자의 TMI
자연권 사상의 개척자, 존 로크
- 70** • KPFIS의 서재
- 72** • 재정 캘린더
- 78** •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드

유아교육 재정현황과 국제비교

최근 유아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한 소개와 유아교육의 재정 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개요

최근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치원 3법’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모든 유치원의 K-에듀파인² 사용 의무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정보공개 확대 및 학부모 참여 기회 보장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유아교육비 보육료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배경이 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통 보육·유아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만 3~5세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를 이용하든 생애 첫 출발선에서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1년 5월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는 한편,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2012년 만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확대 적용하였다. 그런데 국가 또는 시·도교육청 중 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1. 지난 1월 13일,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정보공개 확대 및 학부모의 참여 기회 보장(「유아교육법」)과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K-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통한 교비회계의 투명성 확보(「사립학교법」)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급식 기준 적용(「학교급식법」)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기반 마련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교육부 보도자료(2019.12.31.)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K-에듀파인’을 2020년 1월 2일에 개통하였다. 사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 회계에 적합하도록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3월 1일에 개통할 예정이다.

간 논란이 매년 반복되었고, 2016년 일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여 보육대란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감사원, 2016).

이에 따라 누리과정 재원조달 문제 해결을 위해 2016년 12월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당초 2017~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국회는 2019년 12월로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하 유아교육회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아교육회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 및 교육세 전입금 외에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금액이 「유아교육회계법」으로 전입된다. 교육세와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세 전입금으로 조달하는 것도 「유아교육회계법」 상 가능하다.

표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주요 내용

조문	내용
제3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6조에 따른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원금 2. 제6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중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② 정부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제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를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도 교육감이 편성·집행하도록 한다. ② 시·도 교육감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 법제처(www.law.go.kr)(인출일: 2020.2.3.)

2 _____ 유아교육 재정 지원 현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교육 재정 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세입은 교육세와 일반회계 전입금(국고 지원분)으로 구성된다. 2015~2020년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누리과정의 경우 2년간(2015~2016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유아교육회계법」 제정 이후인 2017~2019년, 3년 동안은 교육세 일부와 국고를 재원으로 지원하였다. 2017년에는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일부(8,600억원)만 국고로 지원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전액(2조 586억원) 국고로 지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출은 누리과정 소요비용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교부금으로 교육부가 매년 해당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면,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경우 직접, 어린이집의 경우 시·도로 전출하여 집행한다. 연도별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특별회계 시행 이전인 2015년 3조 9,455억원, 2016년 4조 420억원이었고, 특별회계 시행 이후 2017년에는 3조 9,409억원, 2018년 3조 8,927억원, 2019년 3조 8,153억원, 2020년 3조 7,846억원 지원하였다.

표 2. 유아교육비 보육료³ 지원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세입	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455	40,420	-	-	-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	39,409	38,927	38,153	37,846
	- 교육세	-	-	30,809	18,341	18,341	17,330
	- 유치원 교육비	-	-	30,809	18,341	17,628	17,330
	- 어린이집 치우개선비 및 운영비	-	-	-	-	713	-
	- 국고	-	-	8,600	20,586	19,812	19,635
	- 전년도 세계잉여금	-	-	-	-	-	881
세출	유치원 교육비	18,663	19,873	18,533	18,341	17,628	17,518
	어린이집	20,792	20,547	20,876	20,586	20,525	20,328
	- 보육료	-	-	-	-	19,812	19,471
	- 치우개선비 및 운영비	-	-	-	-	713	856
	세출 합계	39,455	40,420	39,409	38,927	38,153	37,846

주: 세입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서 지출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9); 교육부, e나라지표(인출일: 2020.2.4.)

³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이다.



교육부에서 교부한 시·도교부금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중앙정부이전수입(관)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목)으로 편성되며, 세출에서는 교육복지지원(정책사업)의 누리과정지원(단위사업)에서 집행된다. 시·도교부금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아교육지원금의 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표 3. 2020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세입〉 과목구분과 설정					
장	관	항	목	원가통계목	설정
[1000] 이전수입	[11000] 중앙정부 이전수입	[11400] 특별회계 전입금	[11401]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7조에 의하여 통지된 특별회계전입금
〈세출〉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설정
[050] 교육	[051] 유아 및 초중등교육	[03] 교육복지지원	[07] 누리과정지원	[01] 누리과정지원	○ 3~5세 누리과정 지원 경비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반비 등) ○ 3~5세 누리과정 업무지원을 위한 제반 경비

자료: 교육부(2019),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시·도별 세출 결산액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시·도교육청 전체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2014~2018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조 3,460억원에서 2018년 3조 9,421억원으로 5,961억원(2014년 대비 17.8%) 증가하였다. 2018년 기준, 누리과정 지원사업의 세출 결산액이 가장 큰 시·도는 경기(1조 254억원)이며, 다음으로 서울(6,057억원)이었다.

표 4.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누리과정 지원) 세출 결산

(단위: 억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33,460	39,333	38,779	38,993	39,421
서울	5,082	5,934	6,066	5,918	6,057
부산	2,000	2,247	2,296	2,282	2,261
대구	1,663	1,864	1,896	1,888	1,863
인천	1,749	2,560	2,328	2,327	2,261
광주	1,190	1,374	1,369	1,370	1,305
대전	1,126	1,295	1,281	1,272	1,244
울산	859	998	1,034	1,017	1,012
세종	111	177	214	248	265
경기	8,944	10,308	10,389	10,036	10,254
강원	964	1,106	1,121	1,086	1,040
충북	1,103	1,257	1,256	1,266	1,205
충남	1,532	1,749	1,800	1,816	1,781
전북	1,275	1,479	724	1,411	2,092
전남	1,172	1,443	1,404	1,409	1,316
경북	1,760	2,077	2,120	2,182	2,042
경남	2,467	2,867	2,887	2,874	2,837
제주	462	598	596	591	585

주: 2016년 전라북도교육청은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집행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 2016년 미집행분을 편성하여 지급함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교육청 재정(인출일: 2020.2.4.)

3 _____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본 유아교육 현황

OECD가 발표하는 「Education at A Glance 2019(이하 EAG 2019)」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3~5세 유아 취원율은 2005년 76%에서 2017년 87%로 11%p 증가하였으며, 특히 폴란드, 칠레, 터키, 리투아니아, 멕시코 등이 20%p 이상의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유아교육특별회계가 시행된 2017년의 취원율이 95%로 2010년(85%) 보다 10%p 상승하였으며, 아동 대부분이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전형적 초등교육 시작연령(Typical Starting Age of Primary Education)은 대체로 만 6세 이상이며, 호주,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은 만 5세에 시작한다(EAG 2019). 2017년 OECD 국가 36개국 중, 21개국이 3~5세 취원율이 90% 이상으로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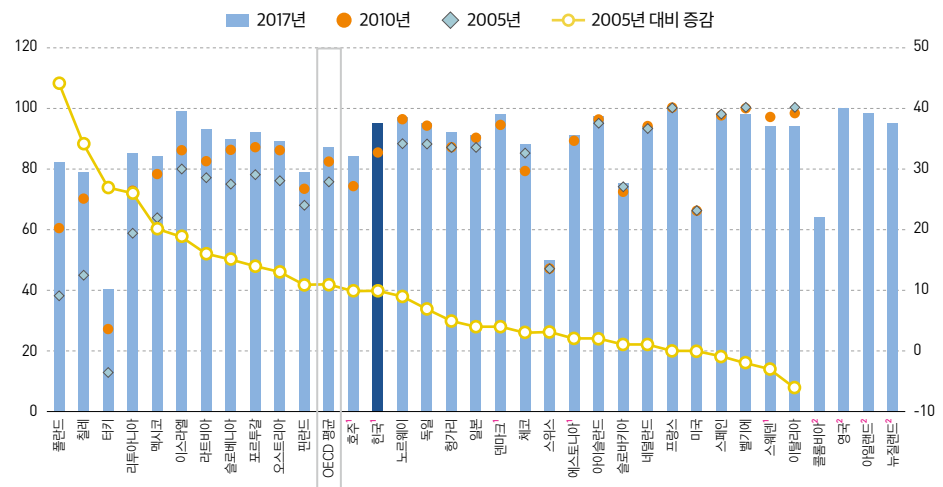
표 5. 2005년 대비 3~5세 취원율의 변화(일부 국가)

(단위 : %, %p)

구분	폴란드	칠레	터키	리투아니아	멕시코	이스라엘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핀란드	OECD 평균
2005년	38	45	13	59	64	80	77	75	78	76	68	76
2017년	82	79	40	85	84	99	93	90	92	89	79	87
2005년 대비 증감	44	34	27	26	20	19	16	15	14	13	11	11

그림 1. 3~5세 유아 취원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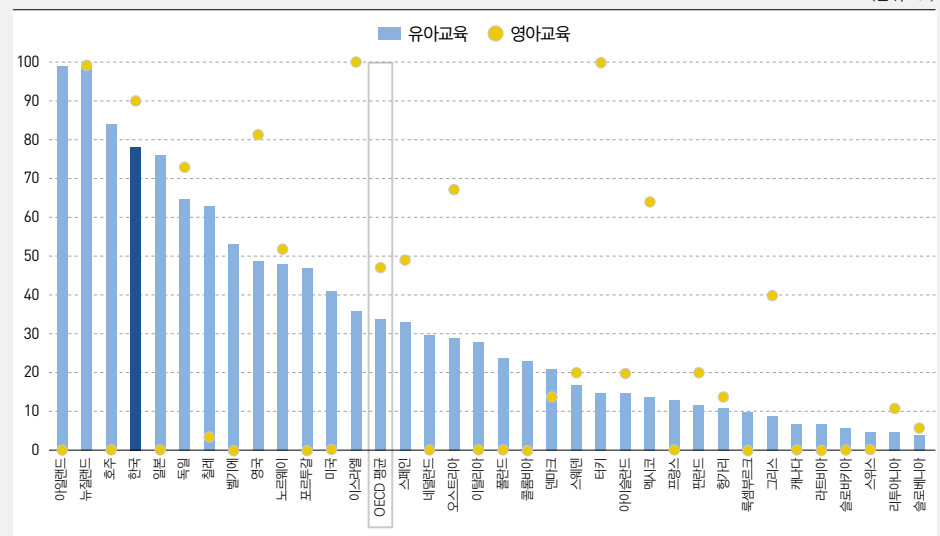
(단위 : %, %p)



유아교육에서 사립교육기관(시설)⁴에 취원한 아동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아일랜드(99%), 뉴질랜드(99%), 호주(84%) 다음으로 한국(78%)인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76%), 독일(65%), 칠레(63%), 벨기에(53%)도 50% 이상의 유아가 사립교육기관에 취원해있다. 3세 미만의 영아교육의 경우는 이스라엘(100%), 터키(100%), 뉴질랜드(99%), 한국(90%), 영국(81%), 독일(73%) 순이며, 일본은 영아교육에 사립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립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영·유아 아동의 비율이 OECD 평균(영아 47%, 유아 34%)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2. 사립교육기관(시설) 취원 아동 비율

(단위 : %)



자료: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⁴ 사립교육기관들은 '정부의존형 기관'과 '독립형 기관'으로 구분된다. '독립형 기관'은 비정부조직이나 정부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단체 등)에 의해서 운영되고, 핵심 재정의 50% 미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정부의존형 기관'도 비슷한 관리 체계를 통해 운영되나, 핵심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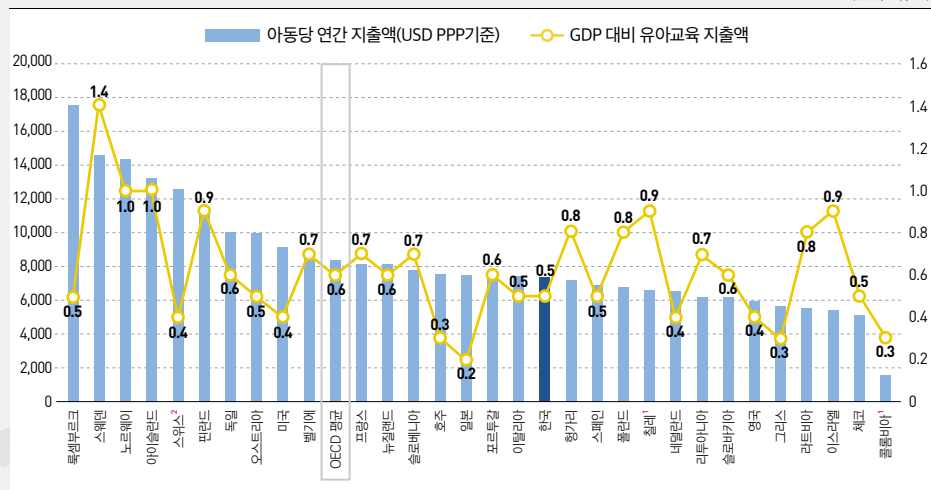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3세 이상의 아동 1인당 연간 평균 공교육비는 \$8,349(미국달러의 구매력 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 환산액)이며, 룩셈부르크가 \$17,533로 가장 높고,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핀란드, 독일, 오스트리아에서도 \$10,000 이상이다. 콜롬비아, 체코, 이스라엘, 라트비아, 그리스, 영국은 유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6,000 이하였다. 우리나라의 유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7,359이며,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0.5%로 OECD 평균(0.6%)보다 0.1%p 낮았다. 호주, 콜롬비아, 그리스와 일본은 유아교육에 GDP 대비 0.3% 이하를 지출하지만, 스웨덴,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1.0%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부담하는 공교육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혼돈해서는 안된다.



그림 3. 아동당 연간 지출액과 GDP 대비 지출액

(단위 : \$, %)



주 1) 기준년도는 2016년이 아닌 2017년임

2) 스위스는 정부재원만 포함됨

자료: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4 ————— 시사점

유아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OECD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유아기는 개인의 최종 지능 80%가 발달되는 지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인지·정서·사회영역 등의 기초능력이 집중 형성되며(Bloom, 1964), 생애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에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다(Heckman, 2007;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인용).

OECD 회원국의 경우, 2017년 유아 취업율이 2005년과 비교해 11%p 증가한 97%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보다 10%p 상승한 95%로 유아교육의 대부분이 유아교육기관(시설)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평균(34%)과 비교해서 사립교육기관(시설)에 취업한 유아의 비율(7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유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7,359이며, GDP 대비 공교육비는 0.5%로 OECD 평균(\$8,349, 0.6%)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유아교육의 확대와 질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과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영·유아교육 및 보육 확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감사원(2016.5.). 감사보고서-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기획재정부(2017.1.8.). 2016년 국민이 뽑은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 보도자료.
- 교육부(2019.8.29.). 교육부 2020년도 예산안 77조 2,466억원 편성. 보도자료.
- 교육부(2019.12.31.). 차세대 지방교육행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 개통. 보도자료.
- 교육부(2019).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준.
- 국회예산정책처(2019).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입법조사처(2019.7.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현황과 과제(이정미)’. 이슈와 논점 제1596호.
- 법제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약칭: ‘유아교육회계법’) <<http://www.law.go.kr>>.
- Heckman, J.J. & Masterov, D. (2007). The productivity argument for investing in young childre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29(3), pp446-493.
- OECD(2019).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Paris: OECD.





02
KPFIS-인사이드

국고보조금 업무 간소화

e나라도움과 공공·민간 ERP 간 연계 지원

e나라도움은 국고보조금의 예산 편성·교부·집행·정산 등 보조금 처리의 모든 과정을 자동화, 정보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조금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다.

김동주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kdj0619@kpfis.or.kr)

장진호 e나라도움운영본부 사원(xox823@kpfis.or.kr)

1 _____ e나라도움-ERP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한 이유

1963년 「보조금관리법」 제정과 함께 탄생한 국고보조금은 2019년 기준 정부 전체 지출의 16.6%¹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 예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및 실시간 집행관리를 위해 2017년 1월 e나라도움 시스템을 개통하게 되었다.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에 있어서는 큰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미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은 각자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ERP)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관리를 해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 사용에 대한 업무처리 시 기존의 자체 ERP 이외 e나라도움에 이중으로 등록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은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받아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연계 표준을 정의하는 등 공공·민간 자체 ERP에서 한 번만 입력하면 e나라도움에 해당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으로 입력·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e나라도움 - 공공·민간 ERP간 표준연계(안)

구분	사업정보	집행정보
주요 연계항목	① 내역사업공통속성분류정보	① 교부등록요청
	② 내역사업정보	② 교부등록결과
	③ 상세내역사업정보	③ 교부실적결과
	④ 사업등록정보	④ 카드매입내역결과
	⑤ 사업반려결과	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⑥ 사업선정결과	⑥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요청결과
	⑦ 교부신청	⑦ 전자세금계산서 조회결과
	⑧ 교부결정정보(수신)	⑧ 집행등록요청
	⑨ 교부신청정보	⑨ 집행등록결과
	⑩ 교부결정정보(송신)	⑩ 집행인력등록요청
	⑪ 보조금계약체결정보	⑪ 집행인력등록결과
	⑫ 중요재산정보	⑫ 집행실적 연계
		⑬ 화면등록 집행실적 연계
		⑭ 화면등록 집행인력실적 연계
		⑮ 복원실적 연계

¹ e나라도움 통계센터 예산 현황 '2019년 국가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중'에 따른 수치이다.



ERP

e나라도움

- ③ 이후 공공·민간 기관에서 연계환경 및 대상 항목을 확정하면 사전에 정의되어있는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 상호 개발을 진행한다.
- ④ 개발 및 테스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수시로 협의하고 진행하며 연계 테스트 완료 후, 최종적으로 '운영전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연계가 완료된다.

그림 3. 운영전환 신청서(예시)

「공공·민간기관 ERP시스템」 운영전환 신청서

☐ 담당자

기관명	OOOOOO					☐ 신 협회 협력부문에 기관장과 담당자 정보 기재
담당자	부서	성명	업무종전역	통제권역	e-mail	비고
담당자	OOOO	OOOO	02-1111-2222	02-1111-2222	0000@ooo.co.kr	
연사 담당자	OOOO	OOOO	02-1111-2222	02-1111-2222	0000@ooo.co.kr	
사용ERP시스템명			(예: 기존, SAP, 자체개발 등)			
국고보조금 배분 상세기재			(예: 유하계좌과금부서, 경기도 등)			

☐ 국고보조금 사업 및 운영시스템 현황

○ 국고보조금 연계 표시표

순	구분	연계시스템ID	연계시스템명	연계기관 종류/구분	연락 (0)
1	연계 대상 시스템	IF-CHN-EPF-0001	공통	연수	수신
2		IF-CHN-EPF-0002	공통	연수	수신
3		IF-RJT-EPF-0120	내역	연수	수신
4		IF-RJT-EPF-0130	내역	연수	수신
5		IF-RJT-EPF-0131	상계	연수	수신
6		IF-TSK-EPF-0078	세출	연수	수신
7		IF-TSK-EPF-0132	영수	연수	수신
8		IF-TSK-EPF-0077	차입	연수	수신
9		IF-TSK-EPF-0079	크루	연수	수신
10		IF-RJT-EPF-0134	크루	연수	수신
11		IF-TSK-EPF-0079	크루	연수	수신
12		IF-TSK-EPF-0148	크루	연수	수신
13		IF-TSK-EPF-0098	공통	연수	수신
14		IF-TSK-EPF-0071	중요	연수	수신
15		IF-EXE-EPF-0092	공통	연수	수신
16		IF-EXE-EPF-0093	공통	연수	수신

순	구분	연계시스템ID	연계시스템명	연계기관 종류/구분	연락 (0)
17	연계 대상 시스템	IF-EXE-EPF-0088	공통	연수	수신
18		IF-EXE-EPF-0194	차입	연수	수신
19		IF-EXE-EPF-0071	현장	연수	수신
20		IF-EXE-EPF-0242	현장	연수	수신
21		IF-EXE-EPF-0192	현장	연수	수신
22		IF-EXE-EPF-0295	공통	연수	수신
23		IF-EXE-EPF-0230	공통	연수	수신
24		IF-EXE-EPF-0074	집합	연수	수신
25		IF-EXE-EPF-0190	집합	연수	수신
26		IF-EXE-EPF-0021	집합	연수	수신
27		IF-EXE-EPF-0020	집합	연수	수신
28		IF-EXE-EPF-0197	집합	연수	수신
29		IF-EXE-EPF-0251	회계	연수	수신
30		IF-EXE-EPF-0254	회계	연수	수신
31		IF-EXE-EPF-0213	세출	연수	수신

☐ 운영전환 요청 일자

동일테스트 완료 여부	OOOO 완료 운영전환 대상 연계 대상 OOOO
운영전환 요청일	2017년 00 월 00 일

※ 연계연일 확인일은 해당 혹은 연차로 연차 후 확인 필요

3. e나라도움-ERP 연계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

e나라도움과 ERP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관련 정책 수립, 대외 정보연계 관련 협의·조정 등을 주관하며, 한국재정정보원 및 요청기관은 연계표준에 맞는 연계개발과 유지보수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행한다.

표 2. e나라도움 - 공공·민간 ERP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역할 체계

기관	역할
기획재정부	·정보 공유 및 연계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대외 정보연계 관련 협의, 조정, 연계원칙 제시
한국재정정보원	·연계 표준 유지관리 및 정보연계 정책 지원 ·요청기관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연계 서비스 제공 ·연계정보의 보안·안정성 확보 및 중복배제 대책 마련 ·e나라도움 관련 정보연계개발 및 유지보수
공공·민간 시스템 연계 요청기관	·연계 표준 가이드에 의해 연계 추진 ·자체 ERP 정보연계개발 및 유지보수

4. e나라도움 - 공공·민간 ERP 시스템 주요 연계기준

e나라도움은 표준화된 연계기준에 따라 연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관 간의 의견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연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있다.

e나라도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연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연계 범위의 최소화)** 기관과의 정보연계는 연계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된 정보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유사·중복성 배제)**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계요청에 대한 기존 연계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의 연계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 ③ **(정보연계 상호협조)**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제공기관과 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 연계정보를 제공 및 이용하여야 한다.
- ④ **(성능과 용량의 고려)** 지방자치단체 정보연계와 같이 연계기관이 많고 연계경로가 복잡하거나 요청 정보량이 상당한 경우, 기관의 장비의 성능과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계방법을 설계하여야 한다.



- ⑤ **(정보연계 표준방식 유지)** 기관간 상호 협의된 정보연계 방식과 연계정보를 위조, 변경, 훼손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정보연계 표준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연계정보 추출 및 임의 가공 금지)** 대외기관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위해 연계정보(원천정보) 추출·제공은 제공기관이 수행하고 제공기관에서 제공한 원천정보를 임의로 가공해서는 안된다.

5 ————— ERP 연계 현황과 향후 과제

e나라도움은 개통 이후 ERP 연계 수요기관 설명회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계 대상을 선정하였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 산하 민간·공공기관의 76개 ERP 시스템(2020년 1월 기준)과 연계를 완료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e나라도움-ERP 연계 확대를 통해 사용자의 이중 업무처리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국고보조금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보조금 관리의 편의성 및 일관성을 도모하여, 현재에도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다.

수요가 계속되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등 정보 관리에 유의하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해 ERP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①

혁신성장과 국가재정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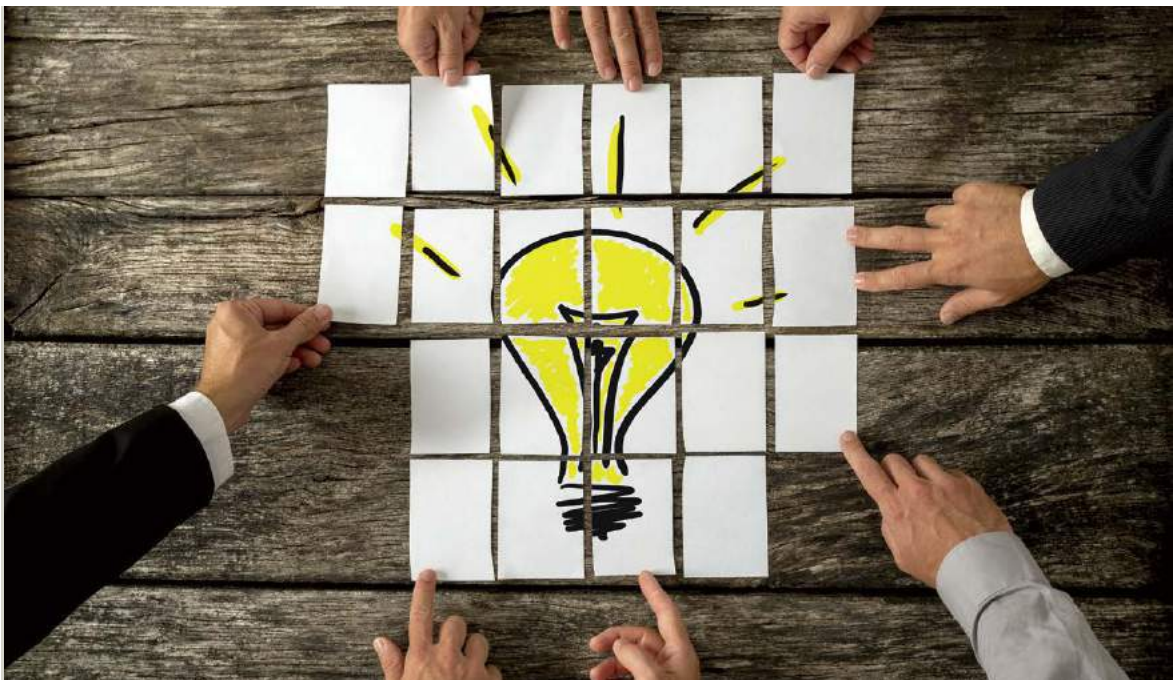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wonshik@kku.ac.kr)



글로벌 사회의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가재정의 역할 및 재정구조의 조정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지표이다. 대외신뢰도가 하락하면 우리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오르고 무역거래가 위축되면서 불경기가 심화된다.

따라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무작정 모든 선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정은 결국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를 재정구조의 변화를 통하여 혁신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현재 우리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고령화에 따른 예산이 급속히 증가함에도 노인빈곤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 및 52시간



근로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많은 예산이 소진되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민간부문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관련된 이익집단들의 저항으로 기업부문에서 새로운 세원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경제성장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당면한 우리 경제의 활로를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적인 예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혁신성장이 필요한 이유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아날로그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옮겨가면서 기존의 경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Quantum-jump 성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어떤 나라보다도 개방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뿐 아니라 정부 부문까지도 총력적으로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혁신성장의 도구로써 빅데이터, ICT,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5G 등이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부문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혁신기반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지원이 필연적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이 더욱 절실한 이유로 첫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 둘째, 획일적 교육시스템 속 창의인재의 부족, 셋째,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부진과 편중된 경제구조, 넷째, 청년실업률 등 일자리 상황 및 불균형 심각 등을 들고 있다¹.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정책은 4차산업혁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혁신성장은 민간기업들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조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한편으로 대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문제들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나 실업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비롯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다.

글로벌 혁신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국가 간 경제적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진국과의 예산 추이에 우리의 예산 구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이미 고령화를 겪었고, 산업 생산에서 서비스 생산으로의 전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잉복지로 인한 복지병을 극복한 국가들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유사한 선진국인 5030국가(미국, 일

¹ 자료: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5240>).

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다. 아울러 사회주의 복지국가에서 2000년대 사실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기책임의 복지국가로 전환한 스웨덴 등도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이다. 우리나라 예산 구조의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정부재정에서 가장 큰 예산 부문은 의무적 지출의 성격이 강한 보건·복지·고용 부문에서 급증하고 있다. 반면 과거 10년간을 비교하면 SOC 등은 금액에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등도 전체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선진국과 다르게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최근 정부예산 구조의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건·복지·고용	81.2(27.7)	120.4(31.3)	144.6(33.4)	161.0(34.3)	180.5(35.2)
교육	38.3(13.1)	52.9(13.8)	64.2(14.8)	70.6(15)	72.6(14.2)
문화·체육·관광	3.9(1.3)	6.4(1.7)	6.5(1.5)	7.2(1.5)	8.0(1.6)
환경	5.4(1.8)	6.9(1.8)	6.9(1.6)	7.4(1.6)	9.0(1.8)
R&D	13.7(4.7)	18.9(4.9)	19.7(4.6)	20.5(4.4)	24.2(4.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5.2)	18.1(4.7)	16.3(3.8)	18.8(4.0)	23.7(4.6)
SOC	25.1(8.6)	26.1(6.8)	19.0(4.4)	19.8(4.2)	23.2(4.5)
농림·수산·식품	17.3(5.9)	19.8(5.1)	19.7(4.6)	20.0(4.3)	21.5(4.2)
국방	29.6(10.1)	37.6(9.8)	43.2(10.0)	46.7(9.9)	50.2(9.8)
외교·통일	3.3(1.1)	4.5(1.2)	4.7(1.1)	5.1(1.1)	5.5(1.1)
공공질서·안전	12.9(4.4)	17.1(4.4)	19.1(4.4)	20.0(4.3)	20.8(4.1)
일반·지방행정	48.7(16.6)	58.2(15.1)	69.0(15.9)	76.6(16.3)	79.0(15.4)
총지출	292.8	384.7	432.7	469.6	512.3

주: 본예산 기준, ()는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이제는 정책 목표인 국민복지와 함께 혁신성장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예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첫째, 혁신성장을 통한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의무적 지출의 확대에 의한 큰 정부는 모두 실패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재정 규모에 있어서 거의 변화가 없다.

둘째, 고도화된 4차산업혁명 산물의 인프라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의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4차산업혁명 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가피하다. 단순한 SOC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도시의 집중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도시의 혁신도시로의 재생도 감수해야 한다. 무인자동차가 가능한 도로, 고속통신망, 고품격화에 대비한 원격진료 인프라, 고령자를 위한 도시환경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행정비용의 절감이다. 필연적으로 정부는 효율적이어야 한다. 개인들은 점차 높은 사회보장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의 소비여력이 낮아진다. 담세부담능력도 낮아진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생활개선욕구는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효율화/자동화와 함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행정 혁신 없이 민간의 혁신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넷째, 세입 측면에서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줄여야 한다. 기업들이 국가를 먹여 살린다. 기업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과거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신기술이 산업화되고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는 조세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선제적 투자가 가능해야 한다. 관료적일 수밖에 없는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는 세 바라기 기업만 만들어서 창의적이지도 않고, 수익도 내지 못한다. 지원보다는 세금감면이 중요하다. 스스로 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부담자의 입장에서 세금의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이제는 세금과 지출 간의 거리감(Remoteness)을 줄여야 한다. 부동산세는 지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개선·공급하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부담에 대한 혜택을 체감하게 해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인상은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혁신이 일어나고 이에 관련된 혁신사업과 혁신기업이 비로소 탄생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은 포퓰리즘적 소비성 분배의 수단이 아니라 미래 전략적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기득권층을 무작정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혁신적 서비스 산업의 지원과 정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기득권 근로자들을 전면 재교육시키고 기업가정신과 창조정신으로 무장된 신진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은 심정으로 정부가 예산시스템의 개혁을 개혁해야 한다.

재정이 혁신경제를 추동할 조건

이정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luckhee@uos.ac.kr)



서언: 재정과 혁신성장정책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성장을 주목하고 이를 위한 노력으로 제반 제도개선과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투입도 대폭 늘렸는데,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9.1% 증액한 512.3조원 규모로 확대재정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18.0% 증액하여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미래산업 지원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미·중 무역분쟁 등 악화되고 있는 대외여건과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이해할 만한 정책기조로 판단된다.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경제의 구축은 필수적일 것이다. 다만, 혁신 성장 관련 예산 증액이 능사가 아니고 재정정책이 혁신성장을 낳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볼 때 현재의 과감한 재정투입 기조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R&D 투자의 구축효과 방지와 공공 R&D의 역할 재정립

먼저 지적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국가차원의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역할배분과 정부의 기능의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고 문제해결형의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내 국민에게 봉사하는 미션을 갖는 조직이다.

구체적인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은 민간행위자가 할 일이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청사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과 제도를 디자인하는 정부의 주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혁신경제의 청사진 제시, 실현 가능한 종합적인 계획 제시가 더 중요한 미션이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위상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이 선제되어야 한다. 이에 의거하여 체계적인 R&D 지원이 진행될 때에 정부의 재정이 민간의 R&D 투자를 구축하거나 R&D 투자실패를 일으키게 되는 과오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D 보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개선

우리나라에서 혁신성장시스템 구축을 위해 혁신경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이를 위한 사업수행방식의 개선, 거버넌스의 재구조화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 왔으나 아직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지 못한 측면이 큰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지원 확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신규 R&D사업의 도입과 기존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R&D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과학자공동체(Scientific Community)가 주도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성장 관련 사업은 장기적 로드맵과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혁신을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되, 개별 사업의 진행은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제안, 상호평가(Peer Review), 협업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혁신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과학자집단의 내부적

인 규율에 대한 미진한 점은 국제적인 과학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보완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주도의 R&D투자와 재정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파편화되고 나누어먹기식 재정지원으로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체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간주체의 의존성(Dependency) 문제 해소

관련된 문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주체의 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 지적되고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혁신경제를 추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GDP 대비 연구개발예산은 전 세계 국가들 중 1, 2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투자예산 대비 실제 혁신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 재정투입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기업활동을 촉발하기보다는 정부의사결정에 의존성을 키우고 보수적인 정부정책에 속박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 연구개발(R&D)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전자 등 대기업 주도의 주력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의 경우도 정부가 좌지우지하면서 지나치게 유행에 쫓린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과학기술 정책을 기술 중심에서 인재와 과학, 혁신 중심으로 바꾸고,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바꿀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지원도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디자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정과 선택과 집중적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민간행위자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전반적으로 유도, 촉발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방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같은 특정산업보다는 보편적 연구개발유도식 재정지원, 직접적 재정지출보다는 조세감면 등 시장친화적이면서 보편적인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요약: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투입

많은 선진국들은 혁신성장을 위해 단기적이고 임의적인 정부주도적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연구개발투자에서 벗어나 그 국가의 정치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Schmoch 외(2006)는 이러한 접근들을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Niosi 외(2000)와 같은 경우 우리나라를 사례로 정부주도의 혁신시스템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요약하면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지원은 재정의 규모보다 재정지원의 방식, 정부와 민간의 관계, R&D 추진체계와 거버넌스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적인 혁신성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한국형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되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제도개선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투입은 국가혁신시스템 설계를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이 수반되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혁신시스템이 안정화된 상황에서야 구체적인 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도 투입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는 그 자체로 혁신성장의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며 결국 국가혁신시스템을 어떻게 선진화할 것인가, 또는 한국형 국가혁신시스템을 미래지향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국정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정지원이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하나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 시스템을 개혁하여 민간주도의 국가혁신시스템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과학자사회의 자율적 규율제도를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기술개발체제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0년도 예산의 재정투입은 단기적 경기부양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재정계획하에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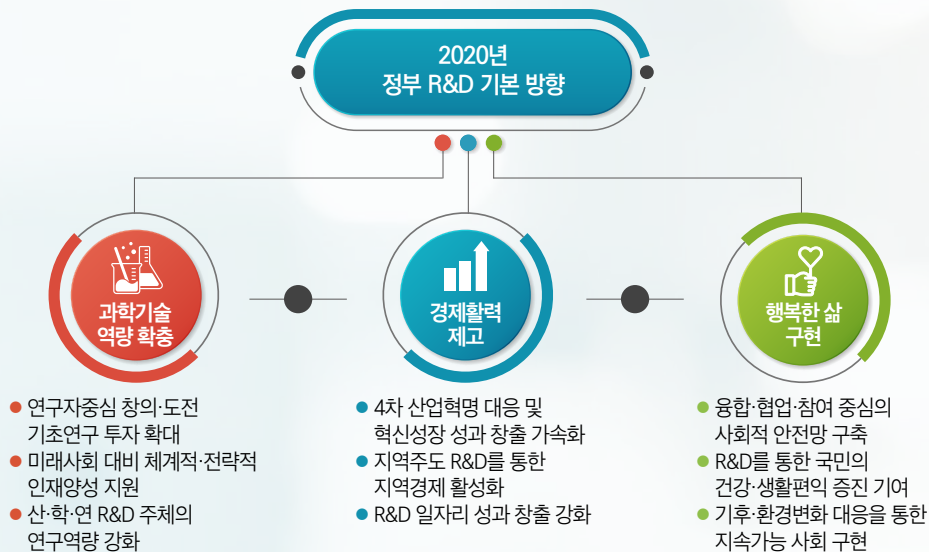
- Niosi, Jorge, Andre Manseau, and Benoit Godin(2000). Canada's National System Innovation. McGill-Queen's Univ. Press
- Schmoch, Ulrich, Christian Rammer and Harald Fegler(2006).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in Comparison: Structure and Performance Indicators for Knowledge Societies. Springer.



툇아보다 :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정부 R&D 예산과 혁신성장

우상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woosh@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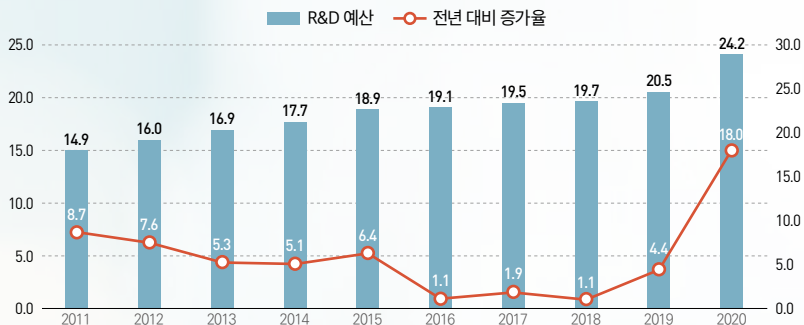


2020년도 정부 R&D 예산 24.2조원·전년 대비 18.0% 증액



정부 R&D 예산 추이: 2011~2020년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R&D 예산(조원)	14.9	16.0	16.9	17.7	18.9	19.1	19.5	19.7	20.5	24.2
전년 대비 증가율(%)	8.7	7.6	5.3	5.1	6.4	1.1	1.9	1.1	4.4	18.0
총지출 대비 비중(%)	4.8	4.9	5.0	5.0	5.0	4.9	4.9	4.6	4.4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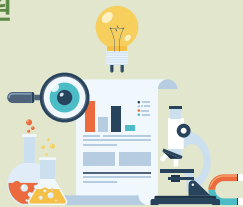
주: 본예산 기준



2020년 정부 R&D 중점 투자분야

1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2.3조원

-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
- 4차 산업혁명 혁신인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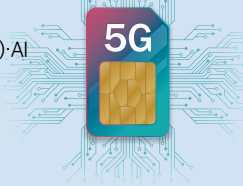
2 소재·부품·장비 분야 1.7조원

- 핵심품목 기술개발 집중 투자
- 인프라 보강을 통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3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0.5조원

- Data·Network(5G)·AI 핵심기술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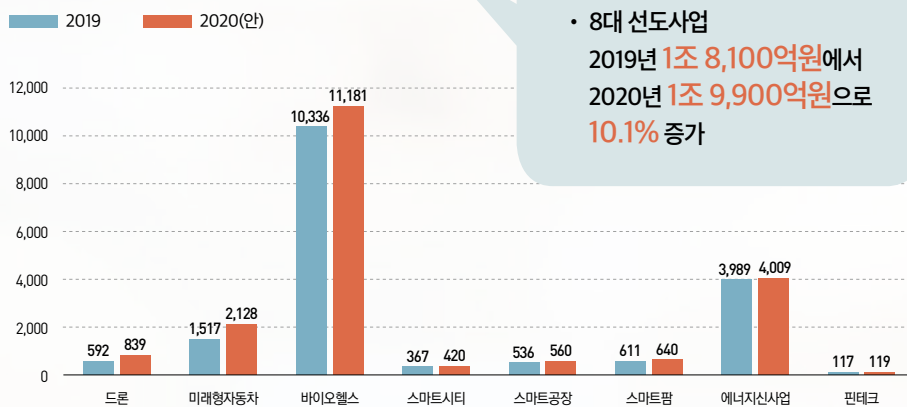
4 3대 핵심산업(BIG3) 1.7조원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



2020년 8대 선도사업 R&D 예산

(단위: 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OSK(2020.1.)



김도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doylek@kpfis.or.kr)

지난 2월 10일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이번호에서는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과 총세출 주요 실적 및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 **402.0**조원

2018 총세입

385.0

예산 대비
-2.1
조원전년 대비
+17.0
조원

2019

402.0

404.1

■ 2019년 총세입

■ 2019 세입예산

총세출 **397.3**조원

2018 총세출

364.5

세출예산현액 대비
97.4%
집행전년 대비
+32.8
조원

2019

397.3

407.8

■ 2019년 총세출

■ 2019 세출예산현액

이월
2.6조원

전년 대비

0.7

조원 감소

불용
7.9조원

전년 대비

0.7

조원 감소

세계잉여금
2.1조원 흑자

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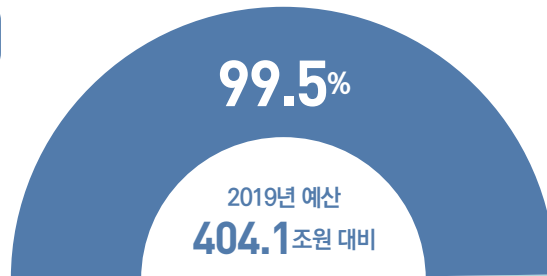
11.1

조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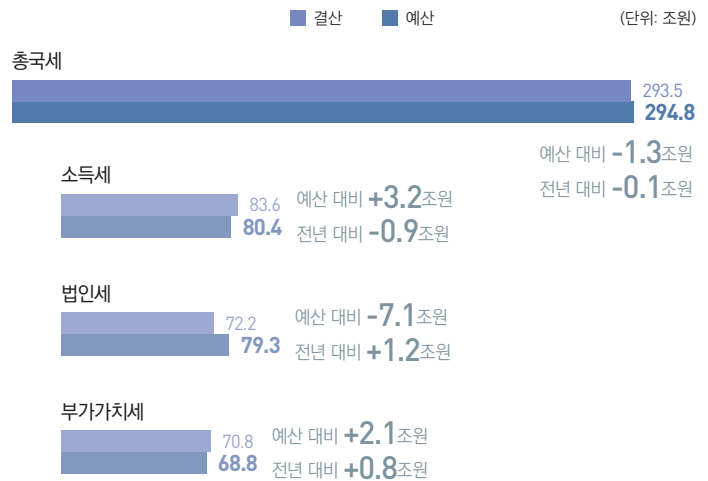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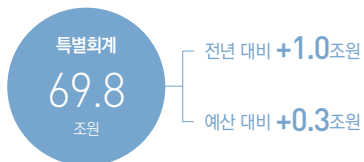
총 세 입

• 2019회계연도 기준

총세입
402.0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2019회계연도 총세입 현황

(단위: 조원)

	2018년 결산	2019년		증감액	
		예산	결산	전년 대비	예산 대비
국세수입 ①	293.6	294.8	293.5	-0.1	-1.3
- 일반회계	285.9	287.2	286.0	0.1	-1.1
- 특별회계	7.7	7.6	7.4	-0.3	-0.2
세외수입 ②	91.4	109.3	108.5	17.1	-0.8
- 일반회계	30.3	47.5	46.2	15.9	-1.3
- 특별회계	61.1	61.8	62.3	1.2	0.5
총세입 (①+②)	385.0	404.1	402.0	17.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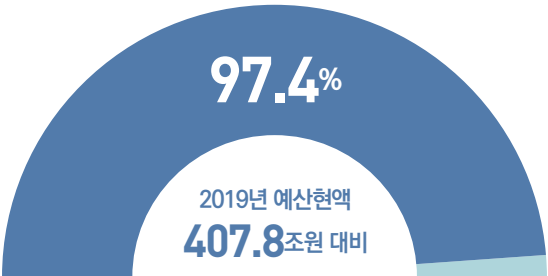
주: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순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총 세 출

• 2019회계연도 기준

총세출
397.3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단위: 조원)

	예산액(A)	+	전년도 이월액(B)	+	초과지출 승인액 등(C)	=	예산현액 (D=A+B+C)	지출액(E)	집행률(E/D)
합 계	404.1		3.3		0.4		407.8	397.3	97.4%
일반회계	334.7		1.6		0.02		336.3	330.9	98.4%
특별회계	69.4		1.7		0.3		71.5	66.4	92.9%

2019회계연도 총세출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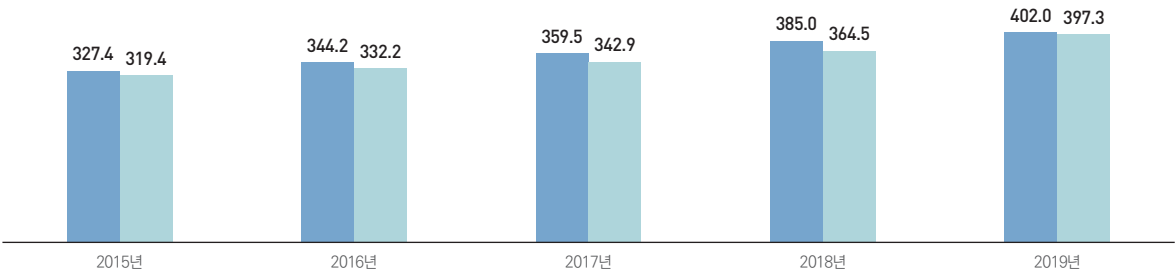
	2018년 결산	2019년		전년 대비 증감
		예산	결산	
일반회계 ①	299.9	334.7	330.9	31.0
특별회계 ②	64.6	69.4	66.4	1.8
총세출 (①+②)	364.5	404.1	397.3	32.8

주: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순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최근 5년 세입·세출 마감 현황

■ 세입 ■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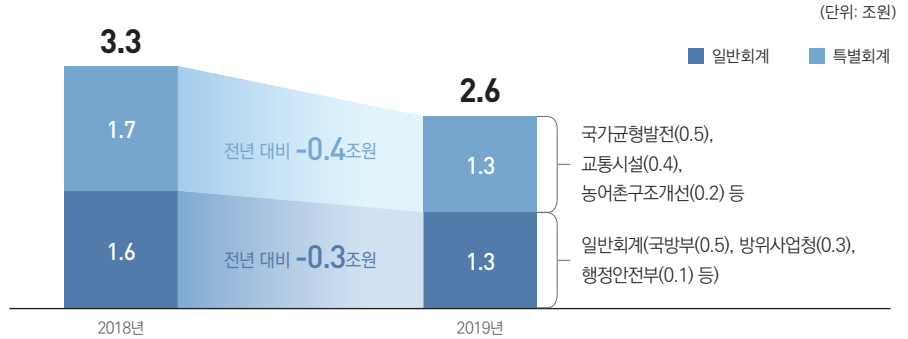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각 연도

이 월 · 불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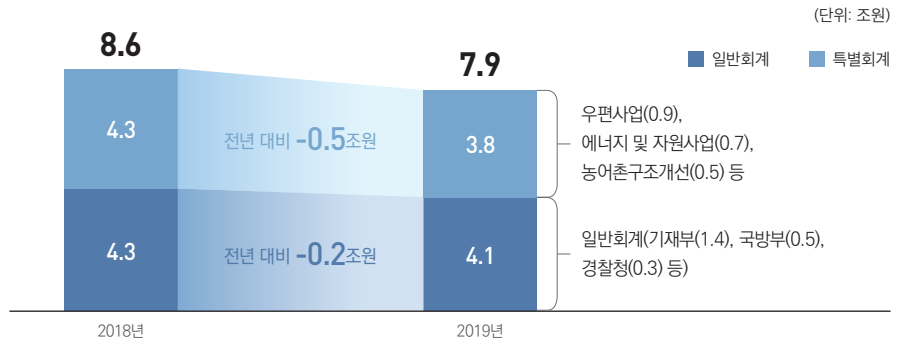
• 2019회계연도 기준

이월 2.6조원



주: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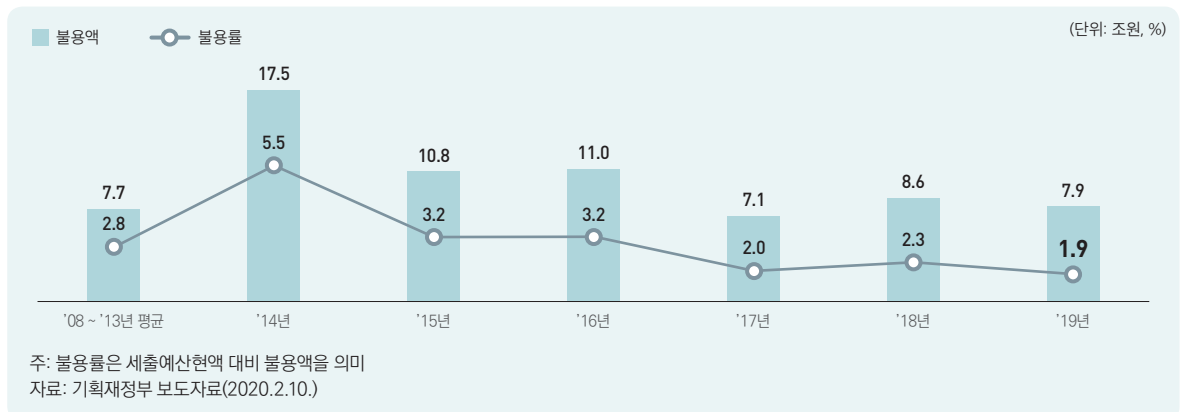
불용 7.9조원



주: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407.8조원)에서 총세출(397.3조원)과 이월(2.6조원)을 제외한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연도별 불용 규모

재정집행점검회의 등 적극적 재정집행관리 결과 불용률은 1.9%로 2006년(1.6%) 이후 최저 수준



세계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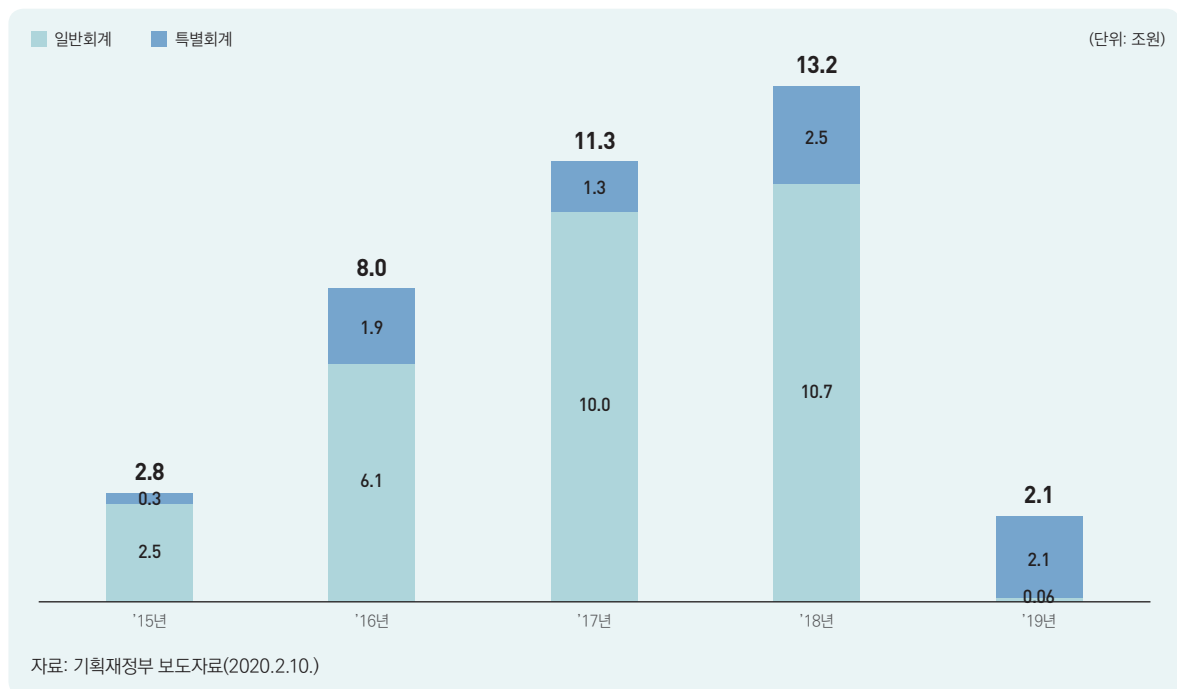
• 2019회계연도 기준

세계잉여금 **2.1**조원

주: 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에서 차년도이월액 등을 차감한 수치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연도별 세계잉여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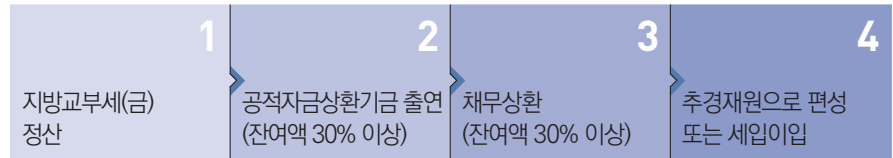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연말 이·불용 최소화 등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1.1조원 감소



세계잉여금의 처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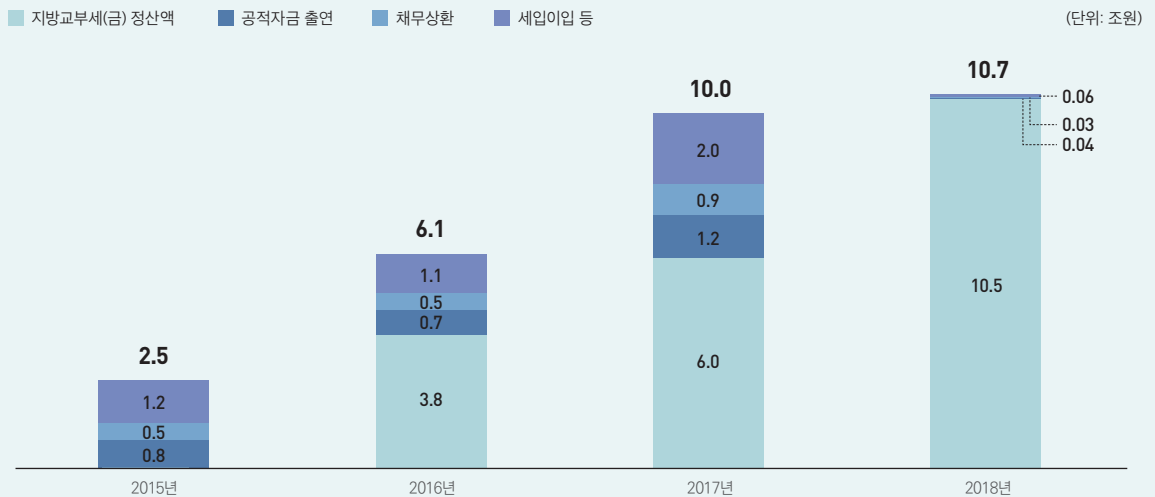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아래 순으로 처리



2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차년도에 세입 처리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의 사용 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5	6.1	10.0	10.7	0.06
- 지방교부세(금) 정산액	-	3.8	6.0	10.5	미확정 ^{주)}
- 공적자금 출연	0.8	0.7	1.2	0.04	
- 채무상환	0.5	0.5	0.9	0.03	
- 세입이입 등	1.2	1.1	2.0	0.06	

주 1) '19년 세계잉여금은 법정 절차(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를 거쳐 4월 초순 이후 사용

2) 구성 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0.2.10.), 각 연도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

전규식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gsjeon@kpfis.or.kr)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은 정부의 예산, 집행, 결산에 대한 재정통계 및 시각화 자료와 재정관련 보고서, 간행물 등 다양한 재정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종합 재정정보공개 플랫폼입니다.

「열린재정」을 통해 본 나라살림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재정통계를 「열린재정」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수입·총지출

이번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괄하는 정부의 총수입과 국방, 사회복지, 보건, SOC 건설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총지출에 관해 「열린재정」에서는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

총수입·총지출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수입 / 지출’

총수입·총지출 추이는 ‘알기 쉬운 재정’의 한눈에 보는 재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수입’ 화면에서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예산(총수입)과 증감률 추이, 재원별 세입 금액, 재원별 세입 구성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재정’ > ‘한눈에 보는 재정’ > ‘우리나라 재정 현황’ > ‘중앙재정’ > ‘지출’ 화면에서는 마찬가지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예산(총지출)과 증감률 추이, 분야별 예산현황, 그리고 각 분야의 부문별 예산 현황(2020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정 현황



우리나라 정부(중앙·지방·지방교육)의 연도별 재정 추이와 지표들 그래프 등으로 제공합니다.

■ 중앙재정

개요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수입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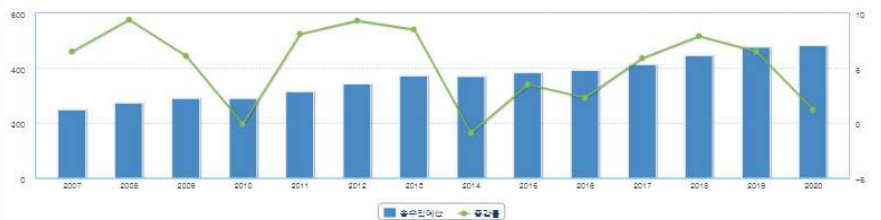
수지

재무

국가예산추이(총수입)

엑셀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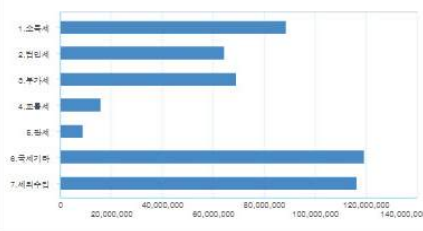
단위 : 조원, %



재원별 세입 금액

엑셀다운로드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세입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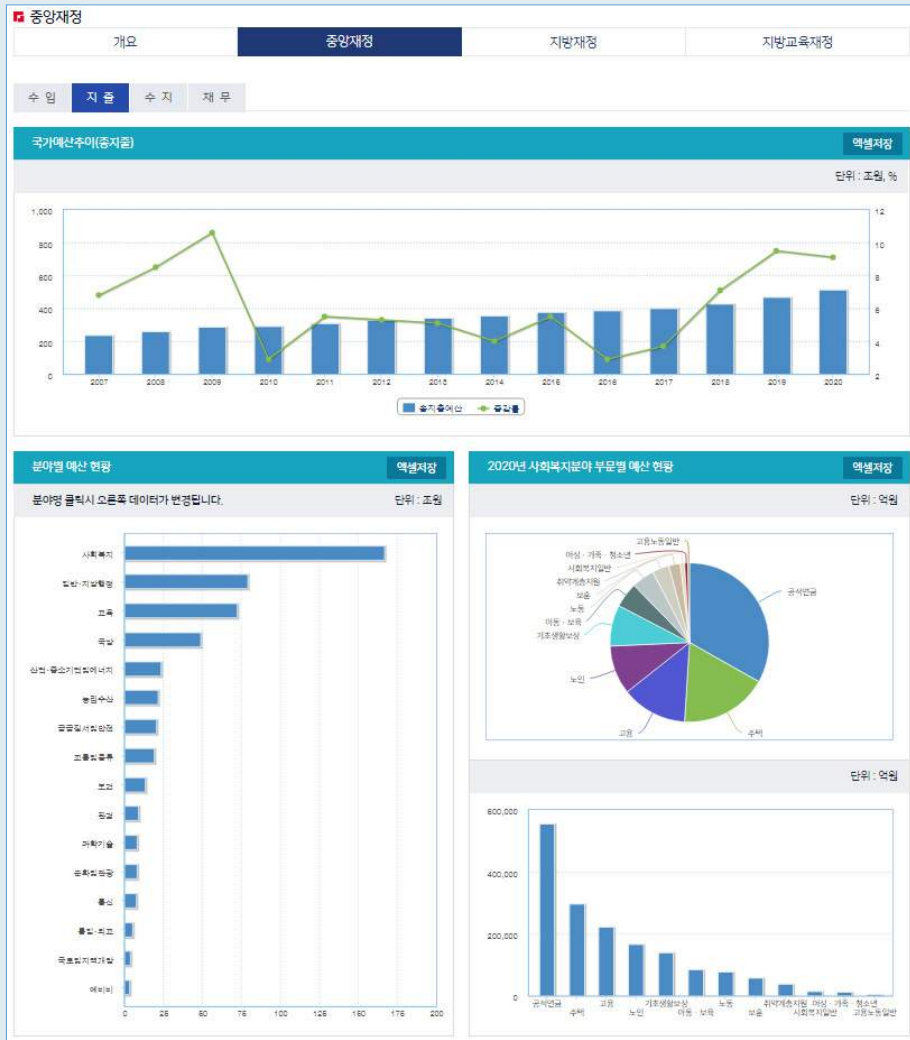
엑셀다운로드

단위 : %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 —————

총수입·총지출 테마통계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자원별 세입예산 > 연도별 / 3개년 추이’

‘알기 쉬운 재정 > 테마통계 > 분야별 세출예산 > 16대 분야 연도별 / 12대 분야 연도별 / 16대 분야 3개년 추이 / 12대 분야 3개년 추이’

테마통계에서는 총수입·총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자원별 세입예산 > 연도별**에서는 2007년~2020년의 **자원별 세입금액**, **자원별 세입 구성비**, **자원별 세입예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별 세입예산 > 3개년 추이**에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연도를 기준으로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조세

수입 추이 그래프와 통계표 조회가 가능하며, 세입 예산 중 금액이 높은 5가지 세입(① 소득세, ② 법인세, ③ 부가세, ④ 교통세, ⑤ 관세)과 국세기타, 세외수입에 대한 3년간 추이 및 연도별 금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출예산 > 16대 분야 연도별에서는 분야별 세출금액, 분야별 세출 구성비, 분야별 세출예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세출예산 > 16대 분야 3개년 추이에서는 재원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 기준 연도 전 3년간 추이를 보실 수 있는데, 분야별 세출예산(연도별), 특정 분야의 예산 추이, 분야별 재원배분 변화 비교 등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야별 세출예산(연도별)의 파이차트에서 관심이 있는 분야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해당 분야의 3년 동안 지출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2대 분야 연도별, 12대 분야 3개년 추이도 동일한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3 총수입·총지출 상세통계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세입/수입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재정통계 > 상세재정통계DB > 예산 > 세출/지출 > 세출/지출 세부 예산편성현황(총지출) /
 세출/지출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총수입·총지출과 관련된 상세한 데이터는 상세재정통계D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총수입에 관해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에서는 단년도 세입과 예산편성 현황을 총수입 기준으로 보실 수 있으며, 소관명, 회계명, 계정명, 수입관명, 수입항명, 수입목명, 정부안 금액(천원), 국회확정금액(천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총지출 관련 데이터는 세출/지출 세부편성현황(총지출)에서는 단년도 세출/지출 예산편성 현황을 총지출 기준으로 보실 수 있으며, 소관명, 회계명, 계정명, 분야명,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전년도국회확정금액(천원), 정부안금액(천원), 국회확정금액(천원) 데이터를 제공하고, 세출/지출 세부편성현황(총지출)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데이터와 함께 목명, 세목명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목록

세입/수입 예산 예산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①이 항목선택

메타정보열기

SHEET

OPEN API

조회기준

●총수입

○세입/수출

Q 조회

※표집정렬을 클릭하면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차순 / ▼내림차순)

XML

JSON

XLS

CSV

TXT

NO	회계연도	소관영	외재영	계정영	수입과목영	수입항명	수입과목영	장부인금액(천원)	국회확정금액(천원)
1	2020	감사원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기타경상기관수입	기타경상기관수입	20,000	20,000
2	2020	감사원	일반회계		수입외재영수입	감수입	기타감수입	432,000	432,000
3	2020	감사원	일반회계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건물대여료	16,000	16,000
4	2020	감사원	일반회계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토지대여료	7,000	7,000
5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경찰기관수입	기타경찰기관수입	기타경찰기관수입	40,000	40,000
6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경찰기관수입	방송국필수익	취학	6,000	6,000
7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관유물대여료	고정자산대여료	기타고정자산대여료	2,000	2,000
8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기타특별회계	취학	취학	26,192,000	26,192,000
9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재산수입	관유물대여료	건물대여료	121,000	121,000
10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재산수입	기타대여수입	기타대여수입	1,000	1,000
11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채화익용연한	발행수입	발행수입	6,238,000	6,238,000
12	2020	경찰청	경찰청원	순익계정	채화익용연한	발행수입	기타발행수입	40,000	40,000
13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가산금	가산금	36,000,000	36,000,000
14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기타경상기관수입	기타경상기관수입	13,196,000	13,196,000
15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발급 수수료	관리료	694,816,000	694,816,000
16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발급 수수료	발급 수수료	111,093,000	111,093,000
17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발급 수수료	계정부과금	100,000	100,000
18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방송국필수익	방송금	141,000	141,000
19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방송국필수익	취학	1,892,000	1,892,000
20	2020	경찰청	일반회계		경상기관수입	방송국필수익	취학	20,000	20,000

[20/1,182]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지출) ※ 열려살림 메타정보보기

SHEET OPEN API

예산기금구분 전체 예산 기금 조회

※ 열려살림을 클릭하면 데이터 정렬이 가능합니다. (▲오름자순 / ▼내림자순)

No	회계년도	소관영	회계명	계정명	분야	부문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무사업명	전년도국회예산결산	당도예산(천원)
1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본경비(...		4,532,000	4,721,000
2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본경비(...		1,555,000	1,644,000
3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본경비(...		6,285,000	5,565,000
4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사회적협사 조사	가습기살균계사전...	가습기살균계조사...		1,740,000	1,153,000
5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87,000	117,000
6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4,380,000	3,027,000
7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835,000	856,000
8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152,000	568,000
9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89,000	113,000
10	2020	가습기살균...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사회적협사 조사...		1,150,000	560,000
11	2020	감사원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감사활동 및 형...	감사활동 및 형...	감사활동 및 형...		430,000	470,000
12	2020	감사원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감사활동 및 형...	감사활동 및 형...	감사활동 및 형...		21,383,000	21,553,000
13	2020	감사원	일반회계	일반·지...	일반행정	감사활동 및 형...	감사활동 및 형...	감사활동 및 형...		151,000	152,000

4 총수입·총지출 관련 기타정보

총수입·총지출 최근 데이터 → 재정통계 >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총수입·총지출 보도자료 →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

총수입·총지출 관련 최신 데이터는 ‘재정통계 >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에서 보실 수 있으며, 먼저 총수입에 관해서는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세출 외 데이터를, 총지출에 관해서는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세출 외 데이터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수입·총지출과 관련된 정부의 ‘보도자료’에 대한 자료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재정자료실 > 보도자료’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린재정」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재정통계(주요지표별) - 2020년 12월 말 기준
 - 이 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항목별 통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구분	단위	2020년 12월 말	2020년 11월 말	2020년 10월 말	2020년 9월 말
총수입	천원	1,151,100	1,141,100	1,131,100	1,121,100
국세수입	천원	1,100,000	1,090,000	1,080,000	1,070,000
세외수입	천원	51,100	51,100	51,100	51,100
기금수입	천원	1,100,000	1,090,000	1,080,000	1,070,000
세입세출 외	천원	1,100,000	1,090,000	1,080,000	1,070,000
총지출	천원	1,151,100	1,141,100	1,131,100	1,121,100
예산	천원	1,100,000	1,090,000	1,080,000	1,070,000
기금	천원	51,100	51,100	51,100	51,100
세출세입 외	천원	51,100	51,100	51,100	51,100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보도자료

총 27건

일련번호	제목	발행일	발행처	조회수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주요재정통계(주요지표별)	2021-01-01	재정통계	1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세입세출 외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국세수입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세외수입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기금수입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총수입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총지출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예산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기금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세출세입 외	2021-01-01	재정통계	21
20210101	2021년 1월 1일 기준 총수입·총지출	2021-01-01	재정통계	21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인구’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감소’, ‘고령화’, ‘인구절벽’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변화하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에 대비하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이달의 이슈키워드

인구



연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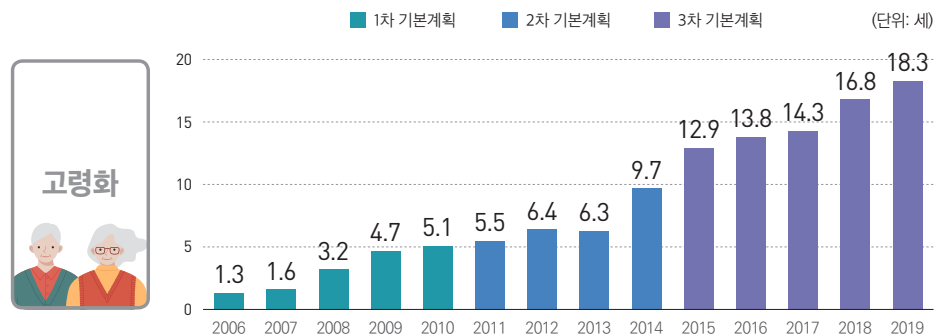
감소 변화 국가 유동인구 여성 기후 경제 수입
일자리 교통 지방 고용 고령화 인구절벽 생산가능인구

통계청의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3%를 차지하며 고령화 사회¹로 진입하였다. 2018년에는 14.9%를 차지하며 고령사회²로 진입하였다. 또한, 2025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3%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³로 진입할 것을 예상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노후가 길어지고 고령층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 변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령사회 대책으로 제1차 기본계획(2006년~2010년)에서 ‘고령사회 대응 기반 구축’을 목표로 15.9조원을 투입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2011년~2015년)은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0.8조원을 투입하였다.

고령사회 대책 재원 투입 규모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0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 중이다. 특히, 기초연금, 장기요양 등의 노후 기반 마련 정책 위주에서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의 노후 대비 강화로 방향을 정하였다. 또한, 노인복지 대책 위주에서 생산인구 확충 및 실비경제 등 구조적 대응으로 방향을 정하여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정책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5개의 추진 분야를 설정하였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 분야로 설정하였다.

¹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7% 이상 14% 미만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² 고령사회(Aged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14% 이상 20% 미만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³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고령사회 관련
과제 주요 내용

		(단위: 개, 억원)	
구분	주요 내용	과제 수	예산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다층 노후보장 소득체계 내실화 · 공적연금 역할 강화 · 사적연금 실효성 재고 ·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9	153,104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신중년 일자리기회 확대 ·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10	3,069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 노인일자리 확대 · 노인일자리 인프라 확충 · 고령자 여가 및 교육기회 확대	7	17,862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의료·건강관리 · 돌봄·요양 · 주거·환경	24	8,410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마련	·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반마련 ·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7	233

주: 2019년 예산 기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019), 「제3차 기본계획」 및 「제3차 중앙행정기관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3차 기본계획 역량집중과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에서 과제 분류 기준에 따라 역량집중과제, 계획 관리과제, 부처 자율과제로 구분하였다.⁴ 역량 집중과제는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 비전·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 주요 국정과제, 현안과 연관 등을 기준으로 고령사회 분야 총 97개 중 17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고령사회 분야
주요 역량
집중과제

추진 분야	역량 집중과제	주요 사업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 제도운영
	1인 1국민연금 확립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크레딧 지원
신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지원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노후준비 정책 추진기반 구축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집주인임대주택사업 공공실버주택 전세임대

자료: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2019),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기초연금지급

기초연금 내실화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기초연금지급 사업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액으로는 소득인정액이 148만원(부부가구 236만 8,000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된다. 지급액으로는 월 최대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정부 기준 2019년 대비 14.6% 증가한 1조 3,176억원을 편성하였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1인 1국민연금 확립과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⁵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⁶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기 사회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 1,149억원을 편성하였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과제의 주요 사업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익활동,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사업은 노인이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7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장형 사업은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인력파견형은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을 구인자(수요처)에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46.2% 증가한 1,201억 원을 편성하였다.



⁴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및 전문가 논의 결과, 담당 부처 및 위원회 내부 과제 검토, 위원회 의견수렴, 예산 당국의 견해 등을 반영하여 과제를 분류하였다.

⁵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⁶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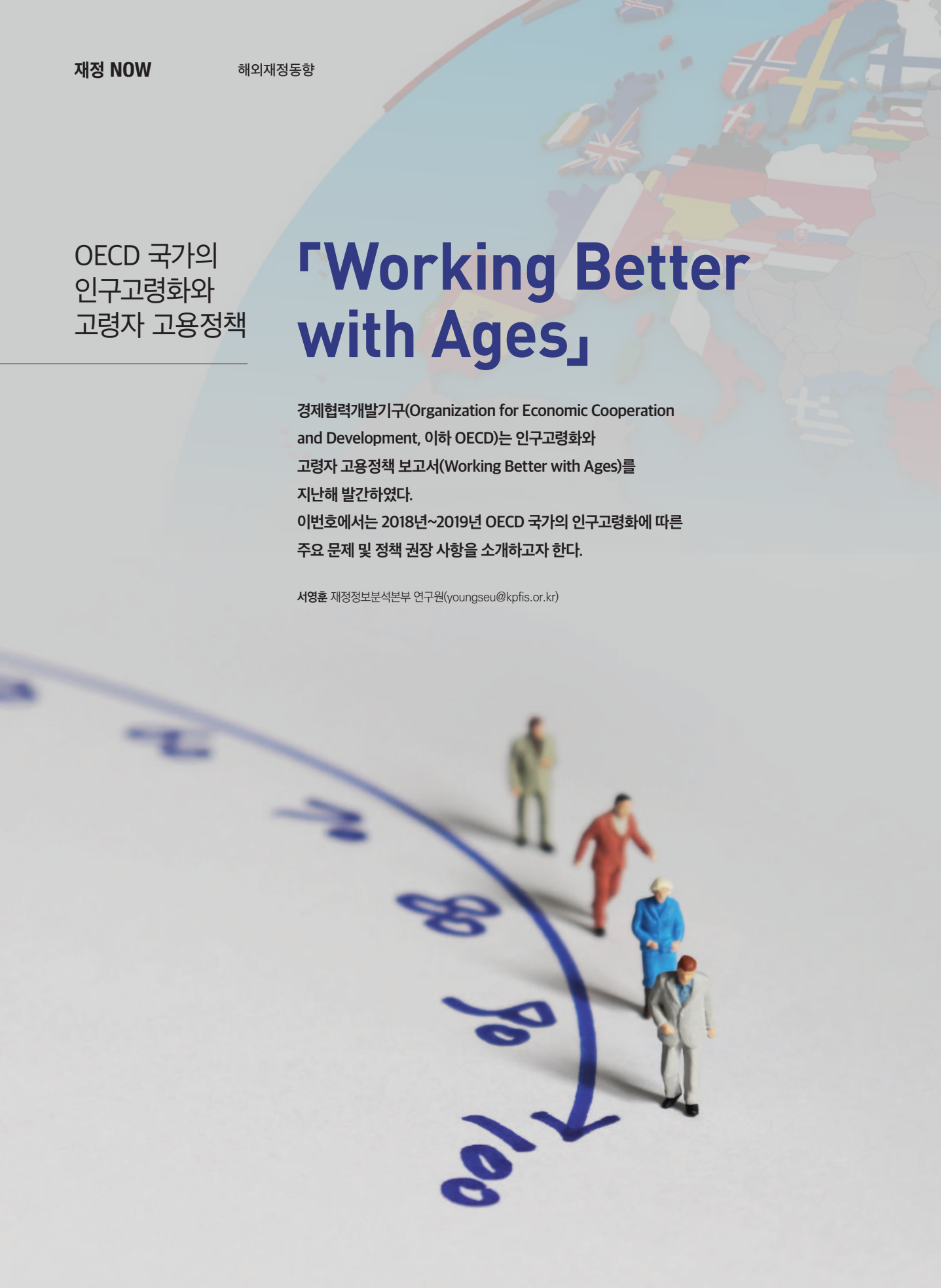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Working Better with Ages」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정책 보고서(Working Better with Ages)를 지난해 발간하였다.

이번호에서는 2018년~2019년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요 문제 및 정책 권장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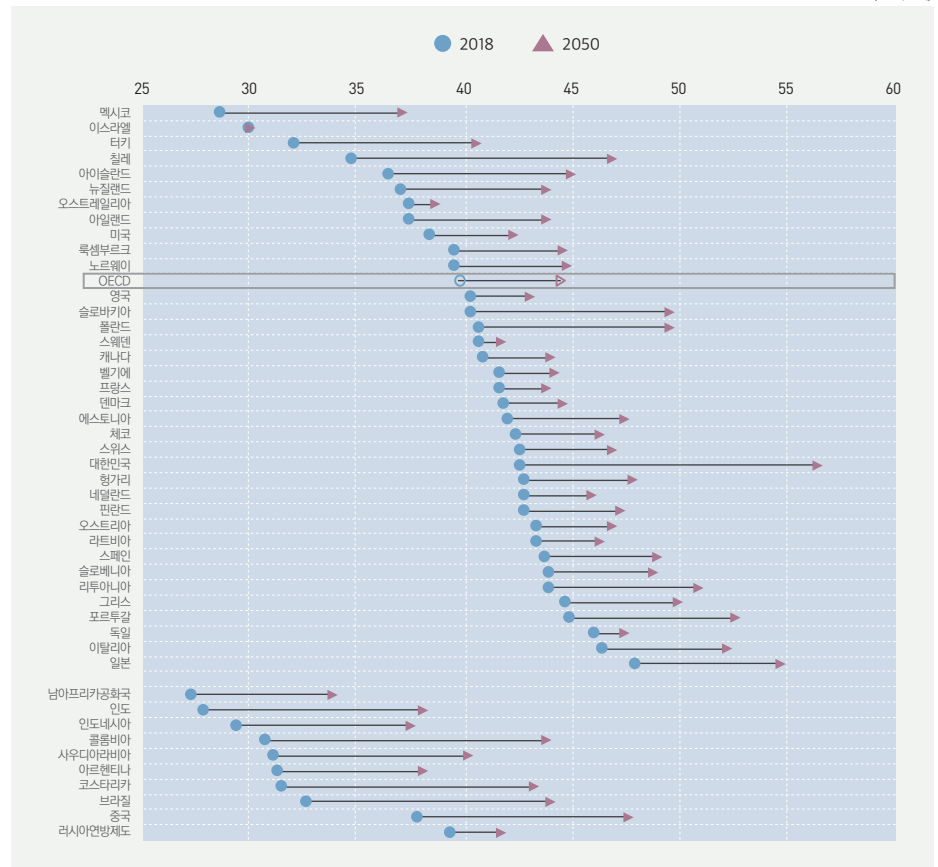


인구고령화

OECD 국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OECD 국가의 중위 연령¹이 40세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향후 30년 동안 평균 45세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몇몇 국가들은 이미 46세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었다.²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신흥국(The Emerging Economies)의 경우 30세 이하로 나타났지만, 출산율 감소로 인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국 또한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았는데, 2050년 중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48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위연령은 2018년 43세에서 2050년 56세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인구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1. 중위연령의 변화

(단위: 세)



자료: OECD(2019), 「Working Better with 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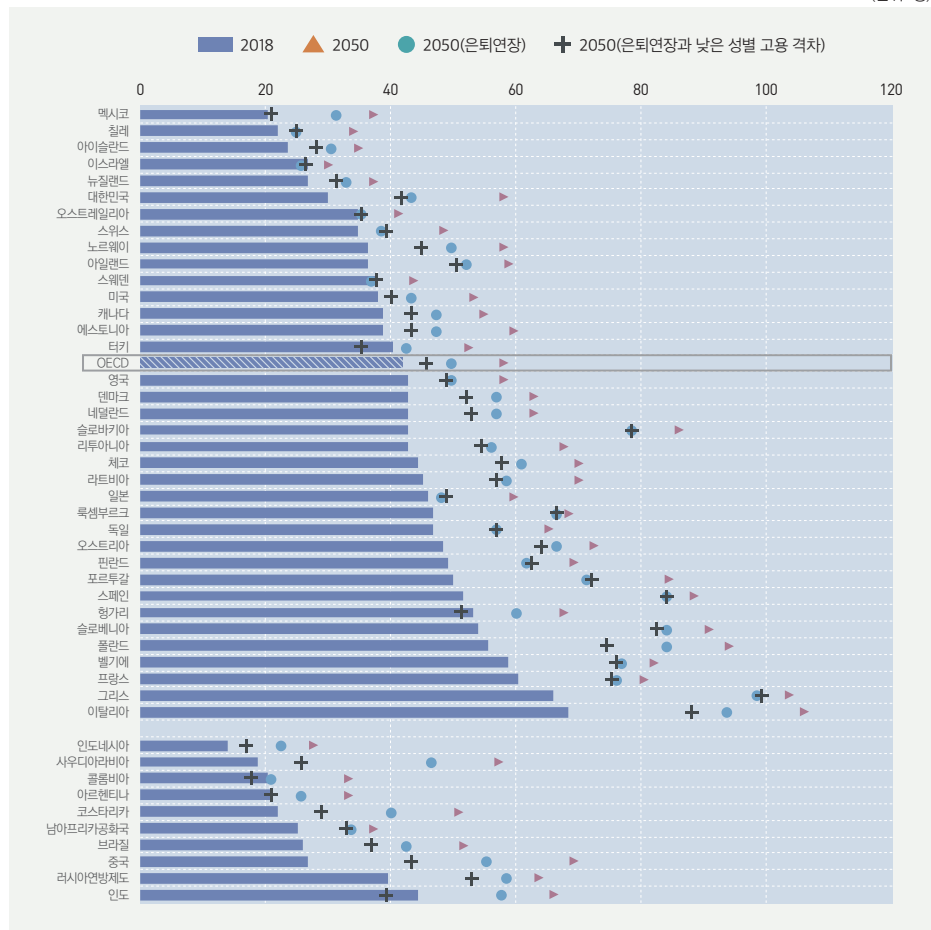
1. 어느 한 시점에서 인구의 중간값(Median)을 의미한다.
2. 이탈리아(45.3세), 독일(46세), 일본(47.9세)로 나타났다.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OECD는 정책적 개입으로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늦추지 않는다면 노인부양부담³의 급격한 증가를 전망하였다. OECD 국가의 노인부양부담은 2018년 43명에서 2050년 58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2018년~2030년 동안 OECD 국가의 1인당 GDP는 최대 0.5%p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고령근로자의 고용이 강화되어 퇴직률이 20% 감소한다면, 노인부양부담은 52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다. 퇴직 감소와 더불어 성별 고용률 격차를 현재의 50%⁴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노인부담부담은 46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2. 노인부양부담

(단위: 명)



자료: OECD(2019), 『Working Better with Ages』

³ 취업자 100명이 부양하는 5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의미한다.

⁴ 2018년 OECD 평균 남성고용률은 69.0%이며 평균여성고용률은 52.5%로 나타났는데, 성별 고용률 격차는 16.5%p로 나타났다.

고령자 노동시장 참여율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령자(55~64세) 노동시장 참여율은 현저하게 증가했다.⁵ 특히,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네덜란드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18%p 이상 증가하였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율이 2.3%p 감소하였지만 82.4%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OECD 국가에서 노동시장 은퇴 연령은 2018년 남성 63.7세, 여성 65.4세로 2000년 대비 남성은 2.3세 증가, 여성은 2.7세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금제도의 개편, 복리후생 제도 개편 등과 같은 정책적 개편과 학업 기간의 증가, 건강 증진 등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반면,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의 경우 연금체계의 미확립, 비공식 노동자 높은 비중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은퇴 연령이 높았으나,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⁶

고령자 고용정책 제안

OECD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노동시장의 공급, 수요, 고령자 개인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다만,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개별 국가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노동시장의 공급: 고령노동자의 유인체계 재설계 Rewarding Work and Later Retirement

OECD는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 및 기타 복지 혜택의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령자의 은퇴 시기를 연장하고 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기본적으로 조기퇴직 경로 차단, 연금 개시 연령 상향조정, 수입과 연금의 연계 강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고령자의 은퇴 시기 연장으로 인한 연금 개시 연령은 1년 증가하면 55~74세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0.8%p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시간제 근무 등을 통한 단계적 은퇴와 같은 유연한 퇴직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재정적인 문제와 근로자의 다양한 근로 선호도로 유연한 형태의 퇴직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이는 상당수의 고령자가 파트타임 일자리와 부분연금의 결합을 은퇴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등 많은 OECD 국가들은 근로와 연금의 결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연금과 근로를 통한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의 삭감 또는 근로 인센티브를 제한하도록 설계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덴마크, 스페인 등의 국가들의 경우 부분 퇴직은 허용하지 않으나 퇴직 후 정해진 소득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 혜택이 줄어든다.



⁵ 2008년 56%에서 2018년 64%로 8%p 증가하였다.

⁶ 브라질의 은퇴연령은 1970년 남성은 72.1세, 여성은 73.6세였으나, 2000년 남성 66.7세, 여성 62.8세로 낮아졌다.

노동시장의 수요: 고령자의 고용기회 확대 Better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older workers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고령근로자의 직장유지율(Job Retention)이 증가했으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 몇몇 국가의 직장유지율은 세계 금융위기 전의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OECD는 채용 및 은퇴 등에 있어 연령차별 금지를 제안하였다. 이미 모든 OECD 국가에서 연령차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차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흔하게 존재한다고 보았다. EU의 2015년 조사 결과에서 관리자를 포함한 응답자의 60%가 고령은 구직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금지법 외에도 최근 몇몇 OECD 국가에서 고령근로자 고용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있다. 네덜란드는 '모든 연령층을 위한 고용(Vacancies for All Ages)' 프로젝트를 통해 연령차별에 대한 심사를 받는다. 프랑스의 공공부문 고용지원 서비스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적성검사를 통해 숙련기반의 채용시스템을 구축했다.

둘째, 연공서열적 임금체계⁷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는 고령노동자의 생산성에 비해 고령자의 고용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임금체계의 연공성을 줄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 나라의 경우, 사업주는 낮은 퇴직연령을 선호하여, 고령노동자들이 퇴직 후 이직 또는 전직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과 직업의 만족도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호법제를 제안하였다. 고용노동법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노동시장의 규제는 사업자가 고령근로자의 고용을 회피하거나, 조기퇴직 프로그램 및 의무퇴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과 같은 몇몇 OECD 국가는 무기계약(Permanent Contracts)에 대한 고용보호법안을 완화하면서, 실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재취업 및 소득보조 등의 강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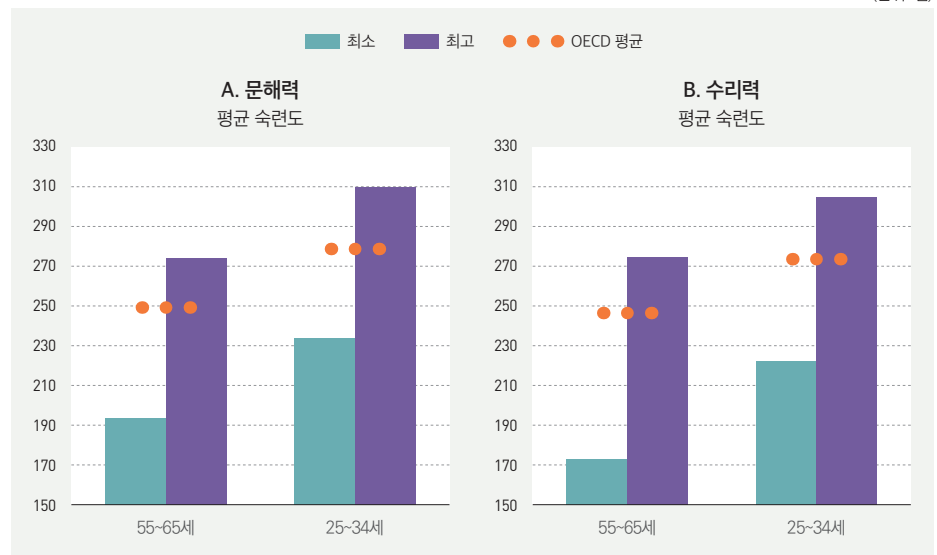
⁷ Seniority Wages를 의미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이다.

고령자 개인: 고용 가능성 증진 지원 Promoting employability Throughout working lives

새로운 기술과 업무 조직형태의 변화에 맞는 생애에 걸친 고령노동자 직업훈련기회의 확대를 제안했다. OECD는 고령노동자들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세계화로 인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OECD 지역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55~64세는 25~34세보다 문해력과 수리력이 약 30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령근로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직업훈련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OECD 국가에서는 고령근로자의 교육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림 3. 고령노동자의 디지털 역량 비교

(단위: 점)



자료: OECD(2019), 「Working Better with Ages」

또한, 직업과 정규교육시스템을 통해 습득한 기술·역량을 평가하고 고령노동자에게 필요한 추가교육 등을 위한 평가인증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몇몇 OECD 국가에서 인증체계를 통해 현재의 훈련수준을 진단하고, 요구되는 수준과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경력증명서(Ervarings Certificaat)를 통해 직무를 통한 역량을 검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핀란드는 30~50세의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새로운 교육·훈련(VET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⁸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을 의미한다.

2020년 예산은 혁신성장 가속화, 경제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혁신을 이끌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소개한다.

담당. 김상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gkim@kpfis.or.kr) 글. 김광균 사진. 안지섭, 황원

일상의 문화서비스가 한자리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을 의미한다. 기존 생활SOC 공급방식은 정부 부처간 칸막이식 공급체계, 부지 확보 문제, 열악한 재정 등의 한계로 생활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과 이제연 정책연구관을 만나 생활SOC 복합화 사업내용을 들어봤다.

삶의 질 높이는 생활 속 인프라

이제연 정책연구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을 지내던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파견되어 현재 지역혁신국에서 지역혁신성장

계획 수립과 인구 감소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혁신국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생활SOC복합화추진단에서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 작성과 컨설팅, 사업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맡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해왔다.

지역주도와 중앙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생활SOC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훈령 제2조에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모든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주민건강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이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과 삶의 조화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처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Interview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국
지역혁신과

이 제 연

정책연구관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성장과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대규모 기반시설 공급에 치중하면서 정작 나와 내 가족, 주변 이웃의 삶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고 생활수준의 차이도 커졌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워라벨’(Work-life balance),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만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죠. 생활SOC는 우



리 동네 인프라, 생활 속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우리 삶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시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2020년 예산안 특색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존 대부분의 생활SOC 사업은 매칭 공모방식에 국고보조율도 낮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지역에서는 생활SOC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부지 확보가 어려워 개별시설이 아닌 복합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1개 과가 1개 시설

을 공급하는 칸막이식 공급체계로는 지역의 복합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부지 문제 해소, 사업기간 단축, 예산 절감,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 간 격차 완화에 초점

생활SOC 복합화는 여러 부처가 관장하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방식으로 주요 생활SOC 시설 서너 개를 하나의 시설물로 건축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가운데 복합건설 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4개 부처 10종 시설이다.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 건축하기로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지





**여러 개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 건축하기로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편의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 부지 확보,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방정부 입장에서 부지 확보, 예산 절감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된 10개 시설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희망 사업을 골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주민의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었다.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복합화 시설일 경우 기존의 시설별 국고보조율에 10%p를 추가로 지원해 개별사업으로는 선정되기 어려웠던 사업도 복합화로 추진하면 선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학교 복합화의 경우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중앙과 지방정

부는 건설비를 부담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협업사업 모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과를 보면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전문기관TF의 사업계획 심사, 사업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들은 국무조정실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하게 되며,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시·도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해 빠듯한 일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간 격차 완화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복합화 대상 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많아서 추가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경험도 들을 수 있었다. “일반적인 사업 선정 과정을 보면 선정위원들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선정결과만 통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복합화 사업에서는 각 부처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며 신청한 사업이 최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이제연 정책연구관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단순히 여러 기능을 가진 시설을 한 공간에 집적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야기가 활발히 오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똑똑한 서비스업 혁신을 주도할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Interview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정책과

강 해 준
사무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서비스산업 혁신의 필요성과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으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낙후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ICT 솔루션 구축 지원을 통해 스마트서비스 발굴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정책과 강해준 사무관을 만나 사업계획과 지원방안을 자세히 들어봤다.

첨단 ICT 솔루션 도입으로 기업경쟁력 끌어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제조 혁신, 창업·벤처기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및 협력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삼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기술정책과 강해준 사무관은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을 맡아 준비작업을 해왔다. 올해 처음 예산이 배정된 신규 사업으로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업무 절차와 방식 개선을 위해 ICT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의 발굴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에 AI·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된 첨단 ICT 솔루션을 보급해 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함으로써 사전 진단이나 수요 예측 등 선제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발표와 함께 후속 논의가 이어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높이겠다는 목표와 함께 그에 대한 육성방안으로 ▲제조업 수준의 재정·세제·금융지원 ▲생산성·고용·R&D 통계포털 구축 등 산업 표준화 ▲서비스업·제조업 융합발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위원회 등 4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서비스업의 높은 부가가치 창출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ICT기술에 대





단순 업무를 빅데이터나
AI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면
한층 고도화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대기업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견줘 자금과 인력은 물론 정보 부족으로 ICT에 대한 투자가 훨씬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ICT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이 추진된 것이다.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여전히 수기 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키오스크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하청업체의 경우 모든 계약이나 발주를 종이문서로 진행하고 있어 나중에 해당 문서를 찾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업무 효율이 낮은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ICT기술을 활용하면 기업 경쟁력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동화·빅데이터 활용 창의적인 서비스 이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약 150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크게 ▲기업·업종 맞춤형 ICT 솔루션 발굴 및 보급 ▲솔루션의 성공적인 정착 및 새로운 서비스 창출 지원 ▲벤처·스타트업이 선도하는 스마트서비스로 나뉜다. 지원 내용의 마지막 사항은 벤처·스타트업 중에서 뛰어난 기술력이나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서비스업 혁신에 뛰어들려는 기업을 사전 발굴하여 대상 기업과 매칭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업 추진 순서를 보자면 우선 현장에서 지원사업을 대신해서 수행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이 때 수행기관으로 희망하는 기관의 경우 사전에 지원 수요기업 및 솔루션 공급기업을 발굴해 풀(Pool)을 만들어놓고 수행기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맺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 수행기관은 필요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 후 외부의 독립된 평가위원을 위촉해 컨소시엄을 선정하게 되면 지원 대상이 최종 확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도입하려는 솔루션의 효과성,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가능성 등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의 수행기관이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데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단순 작업 방식은 자동화되고 AI·빅데이터 활용에 의해 고도화된 업무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문서 작성, 정보 등록 등의 표준화된 단순 반복 업무는 챗봇(Chatbot)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물류관리 측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적정 구매량 및 재고량 산정, 운송관리 등 최적 물류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단순 노동이 줄어들면 그만큼 업무 효율이 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어느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전화나 문자로 물품을 발주 받는데 영업사원들이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 놓지 못해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하더군요. 그러한 단순 업무를 빅데이터나 AI를 통해 대체할 수 있다면 한층 고도화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단순히 ICT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솔루션으로부터 얻게 되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하면 좀 더 창의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낼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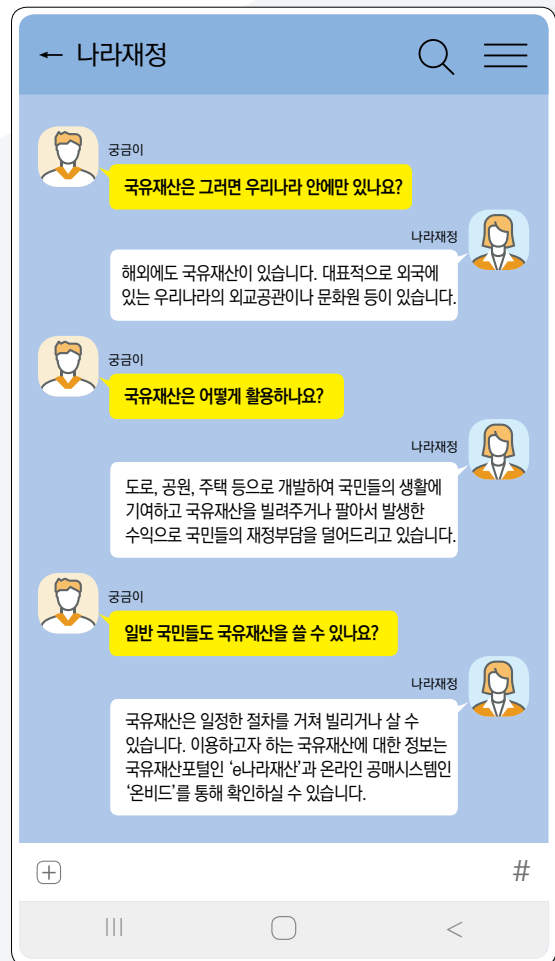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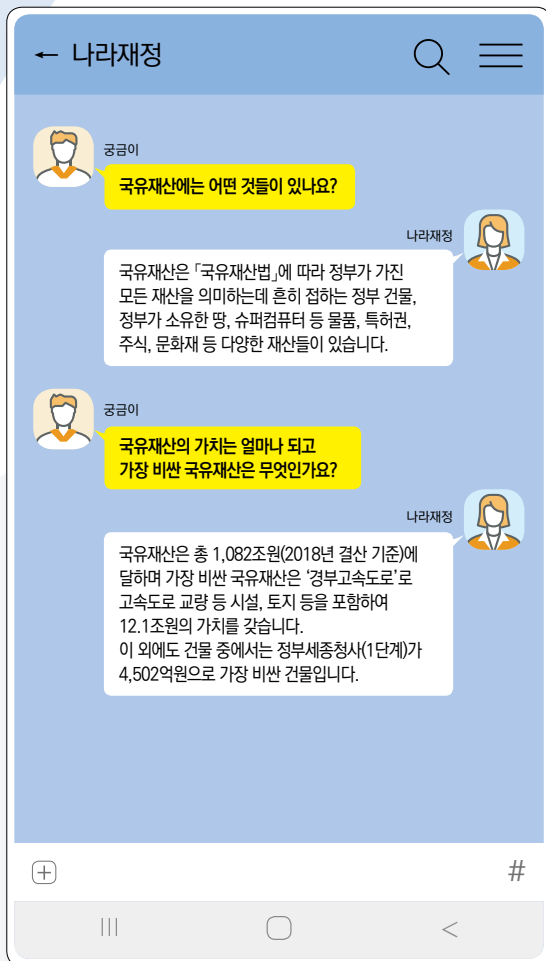
강 사무관은 이 사업이 단순히 ICT 솔루션을 보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으로 서비스업의 혁신을 이루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서비스업 혁신의 모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스마트서비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다른 중소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스마트화의 물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가진 재산은 무엇인가요?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or.kr)

정부가 가진 재산인 국유재산은 그동안 소극적 유지·보전에 중점을 두고 보유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 개발·활용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지나가는 도로, 점심시간 잠시 산책하는 공원,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도서관, 휴식을 위해 찾아가는 국립공원 등 그리고 매일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청와대나 국회 등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흔히들 정부가 소유한 재산이라고 하면 정부부처의 건물이나 ‘국유지’라고 하는 정부가 소유한 땅을 생각하지만 이외에도 주식, 특허권, 슈퍼컴퓨터 등 생소한 정부의 자산도 많이 있고 이를 통틀어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인 ‘공유재산’을 제외하고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국유재산은 크게 토지, 건물, 도로나 다리, 가로등 등의 공작물, 국유지에 있는 나무를 포함한 임목죽, 선박·항공기, 기차나 지하철 등의 기계기구, 유가증권,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 등의 8가지로 구분됩니다. 한편 사용 용도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의 업무나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자연환경이나 문화재의 보존 등에 사용되는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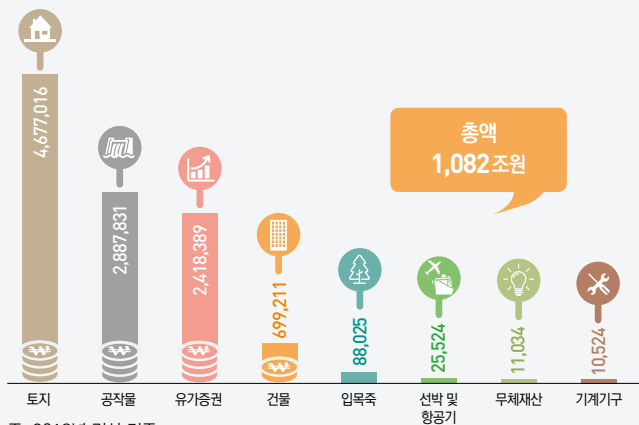
2018년 결산 기준으로 국유재산의 규모는 총 1,082조원입니다. 국유재산 중 가장 비싼 재산은 경부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가 위치한 토지와 고속도로 위의 다리 등 시설을 합치면 약 12.1조원입니다. 건물 중에서는 정부세종청사(1단계)가 4,502억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물품 중에서는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4호기)가 25억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한편 국유재산은 국내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에도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외교에 사용되는 외교공관이나 문화원 건물 등입니다.

정부는 보유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로나 철도 등 SOC를 제공하거나 공원 녹지 등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합니다. 아울러 민간에 국유재산을 팔거나 혹은 빌려주어 발생하는 수입은 국민의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노후된 청사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어린이집,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택공급, 창업지원 시설 공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살 수 있습니다. 자투리 땅을 정부로부터 빌려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 건축한 정부 건물에 싼 임대료로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고자 하는 국민들은 국유지에 대한 정보를 국유재산정보포털인 ‘e나라재산’이나 온라인 구매시스템인 ‘온비드’ 등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종류별 규모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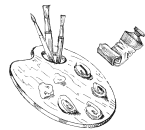




Jan Van Eyck, 〈The Arnolfini Portrait〉, 1434
Oil on panel, 82.2 x 60 cm, The National Gallery, London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과 결 혼 경 제 학

글. 최병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경제학자의 미술관』 저자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그린 얀 반 에이크(Jan van Eyck, 1390-1441)는 15세기 네덜란드의 화가로 프랑드르 화파의 기초를 닦은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창시자라고 불린다. 프랑드르 화파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일부 지역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토대로 하여 발전했다. 프랑드르 회화가 융성했던 시기는 15세기 초로 특히 에이크 형제가 개발한 유채화 기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반 에이크는 정교한 사실적 묘사에 능했으며, 특히 그림 속의 여러 가지 평범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법, 소위 '위장된 상징주의'의 작품을 그렸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상인인 조반니 아르놀피니(Giovanni Arnolfini)의 주문으로 신부 조반나 카나미(Giovanna Canami)와의 혼인 서약식 장면을 그린 초상화로서 근대의 사실적인 초상화가 시작됨을 알리는 작품이며, 또한 그를 위대한 초상화가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놀피니는 당시 이탈리아에서 금융업으로 성공했는데 아마 이러한 신흥 시민들은 자신들의 고상함이나 부유함, 그리고 신앙심을 보여주기 위해 초상화가 필요했다. 이 그림은 단순히 부부의 초상을 그린 것이 아니고 이 부부의 혼인을 증명하는 서약서 같은 그림이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으로도 알려진 이 그림을 찬찬히 보자. 상인 아르놀피니는 왼손으로 오른쪽에 있는 신부의 손을 잡고 오른손은 가슴

앞에 올리고 있다. 이것은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다. 신부 조반나 역시 같은 자세로 여기에 응답하고 있다.

서양의 풍습으로는 결혼서약에 증인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림 속에는 증인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 서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가?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은 이 그림 자체가 증인이라는 것이다. 즉, 이 그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인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화가 자신이 증인이었던 것이다, 이 해답의 열쇠는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거울이다. 반 에이크는 두 사람의 뒷 배경에 볼록 거울을 배치하였다. 이 거울의 중요한 역할은 이 부부 앞에 있었을 화가 자신을 화폭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잘 살펴보면 거울 위 벽면에 “얀 반 에이크가 여기에 있었노라. 1434년”이라고 서명함으로써 반 에이크는 자신의 존재를 그림 속에 확실히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또 플랑드르의 화가들이 즐겨 사용하던 상징적인 기법들이 등장하는데, 이 그림에 쓰인 많은 소도구들은 결혼에 관한 여러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한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상들리에에는 신성한 의식으로서의 결혼식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 발밑에는 작은 개가 있는데, 개의 속성인 충직함을 보여줌으로써 두 사람 간의 변치 않는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평범한 소도구들이 평범하지 않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선뜻 결혼식 그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신부의 옷차림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림 속의 신부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다. 왜 신부는 흰 웨딩드레스를 안 입은 것일까? 사실 이 같은 의문은 현대의 결혼에 관한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에는 결혼식에서 흰 드레스는 필수품이 아니었다.

이 그림이 그려진 르네상스 시대에는 옷이 귀했다. 요즘처럼 대량생산을 통하여 값싸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물의 생산에서 옷감을 짜는 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작업이었고 웬만한 귀족계층이나 부유한 계층이 아니고서는 좋은 옷을 입기 힘들었다. 그러니 결혼식만을 위해서 따로 의복을 마련한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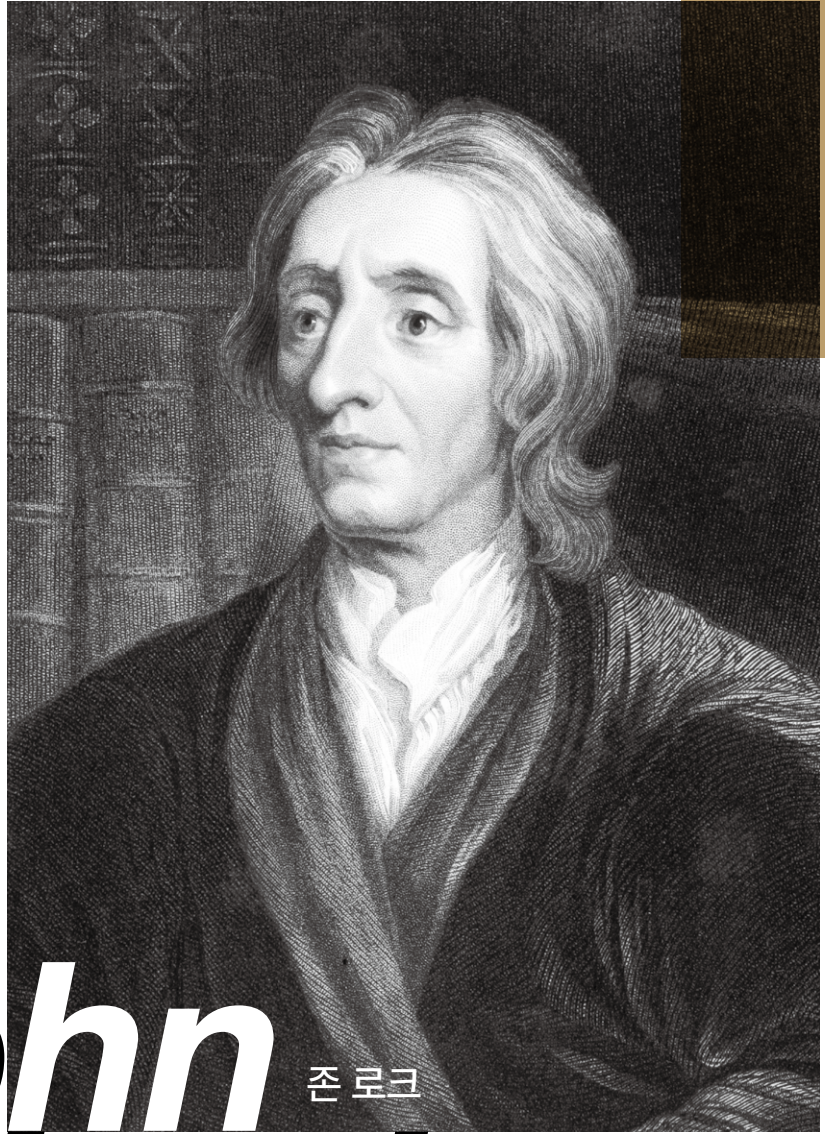
생각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웨딩드레스라는 개념 또한 없었다. 그들은 결혼식 때에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약간의 치장이나 장식을 가미해서 사용했다. 이 그림에서도 신혼부부는 단정하게 잘 차려입고 있을 뿐 아니라 축적한 부를 가지고 세속적 호사를 과시하고 있다. 아르놀피니는 값비싼 모피코트를 입고 있으며 신부 역시 당시로써는 상당히 세련되고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다.

결혼이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결혼은 사람이 일생동안 내리게 되는 수많은 결정 중에 으뜸가는 중요한 결정일 것이다. 그런 만큼 이 결정에는 상당한 위험도 수반된다. 현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에 자신의 결혼을 후회하는 일을 흔히 보게 된다. 이같이 사회적으로 결혼제도가 위기에 처하게 된 현상을 경제이론적으로 보자면, 게임이론에 기초해서 하나의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그 가설은 '결혼하기 위해서 개인이 취하는 지배적 행동전략(Dominant Strategy)은 그 개인의 본능과 반대되기 때문에 결혼의 결과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시장에서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각자의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상호 조화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보다는 상호 파괴적인 결과로 귀결되기 쉬운 것이다.

결혼의 선택을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공리주의(Utilitarianism)적 관점에서 보면 결혼생활로부터 얻는 효용이 혼자 생활할 때 얻는 효용수준보다 크다면 결혼을 선택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독신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생활로부터 얻는 만족감은 결혼 후에 공동생활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결혼생활로부터 얻는 효용수준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Expected Value)일 뿐이다. 나중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기대치가 현실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독신생활의 효용수준보다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다시 찬찬히 보자. 결혼식에서 마땅히 느껴져야 할 따뜻함이나 즐거움 같은 정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호화로운 장식의 의복 뒤에서 위선과 허위의식, 그리고 부부간에 감도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끼게 된다.

자연권
사상의
개척자



John 존 로크
Locke

글.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로크는 헌법적 차원에서
통치자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때에
통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헌법경제학의 개척자, 로크

17세기 영국은 각종 정파들의 권력투쟁으로 잦은 정변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토지 귀족과 결탁한 절대군주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로 시민들의 재산 자유를 억압하여 삶도 몹시 불안정했다. 이런 시기에 정치경제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권력을 무제한 행사하는 전제정부라고 진단하면서 권력이 제한된 정부에서만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 인물이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로크(1632~1704)다.

아버지가 변호사였고 부유한 청교도 가정에서 자란 로크는 철학, 신학, 정치학,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식을 연마한다. 그가 고민했던 건 어떻게 국가권력을 제한해야하느냐의 정치철학적 문제였다. 로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없는 상태, 즉 '자연 상태'를 상정한다. 이 상태가 전

제정치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삶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제정부의 유일한 대안이 인간들의 탐욕과 투쟁으로 점철되는 무질서일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전제정치를 감내하려는 것을 보고 로크는 개탄한다. 그런 터무니없는 공포의 치명적 결과가 억압, 반란, 시민전쟁이라는 걸 왜 모르느냐고 반문하면서 인류역사를 푹푹히 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생존욕구를 위해 행동한다 해도 타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탐욕을 충족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로크는 설명한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이다. 자연법은 인간들 사이에 예측관계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평등한 독립된 존재이고 따라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건강, 소유물 등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자연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다양한 권리들인데 이들은 생명·자유·재산에 대한 권리다. 이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라는 것이다. 법의 역할은 그런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주목할 것은 어떤 대상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다루는 로크의 재산권이론이다. 이 이론이 후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의 재산권은 첫째 노동에 대한 소유, 둘째 노동을 통해서 생산한 산물에 대한 권리, 셋째 주인 없는 토지나 천연자원에 노동을 가한 결과에 대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소유할 자격을 부여하는 게 노동이라는 뜻에서 로크의 이론을 '노동의 소유자적 이론'이라고 부른다.

로크는 재산권이야말로 인간들의 근면과 저축, 자본축적을 통한 번영의 열쇠라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 재산권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 증거로 그는 영국 노

동자의 생활 수준이 인디언 추장보다 훨씬 더 높은 사례를 들었다.

로크는 영국이 경제적으로 네덜란드에 뒤쳐진 이유도 자본시장 규제를 비롯한 정부규제로 재산권침해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희소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경제에 대한 그런 인식은 애덤 스미스보다 100년이나 앞서간 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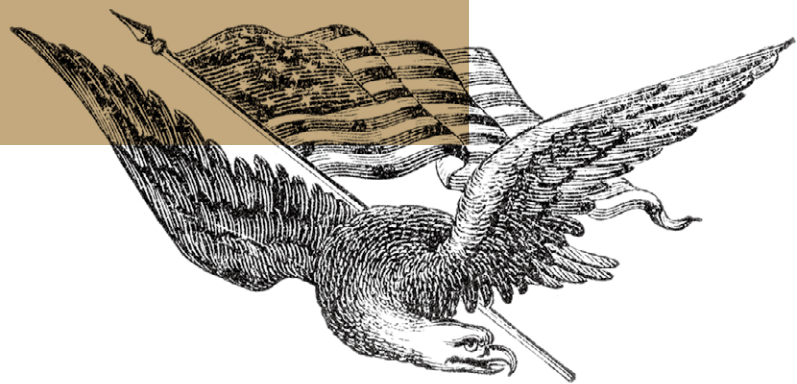
흥미로운 것은 '사회계약'이라는 은유로 설명하는 로크의 국가관이다. 국가 없이도 질서가 가능하지만 개인들이 스스로 재산을 지키거나 권리의 분쟁을 해결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게 로크의 설명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정부는 필요하지만 정부권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이를 제한하

지 않으면 폭정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에 서 자연권은 권력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권력 행사는 즉흥적인 법이 아니라 자연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의거해야 하는데 그런 법은 재분배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자유·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목적은 시민들이 정부에 신탁한 과제이다. 대표자의 동의 없이는 세금도 없다는 로크의 원칙도 재산권 보호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크는 헌법적 차원에서 통치자 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때에 통치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게 그의 탁월한 공로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를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한 '헌법경제학'의 개척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로크의 사상은 미국혁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런 영향은 그 후에도 꾸준히 작용하여 미국인들의 자유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되었다는 게 역사가들의 해석이다.



로크 사상의 힘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로크는 권리이론을 기초로 한 국가이론을 개발했다. 그러나 그의 사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의 자연권사상은 사회가 형성되기 앞서 권리와 법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나 사회에 앞서 어떤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의 이론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다. 재산권 개념은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한 상호존중의 규칙이 정립되어 사회가 형성된 후에 비로소 등장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인간행동을 안내하는 규칙들도 이성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들이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회적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다는 진화 사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성의 힘을 빌려 사회를 구성하려는 건 '합리주의의 미신'이라는 하이에크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로크가 개발한 노동의 소유자격론은 주인 없는 토지나 천연자원을 노동에 의해 개간하거나 변형할 경우에 비로소 그 사물이 내 것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순환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간하거나 변형하는 건 이미 그 사물을 습득하여 소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소유권이론은 소유 대상이 이미 주어졌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런 전제는 소유 대상의 유용성을 발견하는 과정을 도외시하여 특허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견자가 소유자다'라는 원칙을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로크의 사상이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의 사상은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하이에크 등의 진화론적 자유주의의 전통과 대비되는 합리주의적 자유주의 전통을 확립했다. 로크의 위대한 자유의 원칙은 찰스 I세와 같은 집

존 로크의 저서
「인간지성론」(동화문화동판)과
「통치론」(돋을새김)



권자의 자의적인 조세권 행사와 싸웠던 지적 무기였다. 오늘날까지도 영국이 유럽에서 조세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하는 것도 로크의 유산 때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로크의 사상은 미국혁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그런 영향은 그 후에도 꾸준히 작용하여 미국인들의 자유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이 되었다는 게 역사가들의 해석이다. 로크 사상의 영향은 현대 사회의 헌법이 입증한다. 종교의 자유, 재산의 수용·사용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보상, 독립된 법원 등 미국, 유럽, 한국을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적 기본원리는 로크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2차대전 후 국가 규모의 확대, 조세 증가 등으로 정부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급증하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권력에 대한 헌법적 제한이 필요하다는 헌법 경제학적 인식도 재산권을 신성시하는 로크 사상의 영향이다.

경제를 보는 눈을
길러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01

지은이

홍기빈

- 홍기빈 저자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정치경제를 공부하고 2009년 토론토 요크 대학 정치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의 여러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책세상

발간일 2020년 2월 14일

66

아리스토텔레스로

현대의 경제 패러다임을 읽는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정치와 경제 체제는 '지구화'라는 명분 아래 활발하게 재편되고 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21세기를 살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경제 패러다임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래의 전망 역시 불확실하다면,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설명한다. 엄밀한 과학으로서 경제학을 재정립하기 위해 철학적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에 대해 다시 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여러 학문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질문과 틀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몇천 년 동안 경제사상사에 나타난 수많은 생각과 주장들에 큰 영감이 되었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사상은 오늘날 근본적인 지적 모색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경제사상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혜안을 준다.



제1장 현대 경제학의 정의와 문제점

현대경제학은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경제에 대한 정의의 문제점들

제2장 경제라는 말의 역사적 고찰

경제라는 말의 역사

제3장 시장을 발명한 그리스인들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사회와 당시 시대적 사상적 도전

제4장 아리스토텔레스와 인간의 경제

아리스토텔레스 경제사상의 구체적인 의미와 의도

제5장 로빈슨 크루소의 세상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경제사상의 흐름

제6장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 반격을 시도하다

현대 사상들에게 영향을 끼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이디어와 사고방식

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 경제학은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02

지은이
박정호

● 박정호 저자는 연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KAIST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KDI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부회장,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 남북경협한동해포럼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출판사 더퀘스트

발간일 2020년 2월 10일

KPFIS's
library

66 경제학자의 눈으로 세상 읽는 법을 배운다.

모두가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학 지식은 필수가 되었다. 우리는 경제학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삶 속에서 경제학적 원리를 활용하며 살고 있다. 일상에서 이미 경제학이 스며들어 있다면 인류의 본성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인 인문학에서도 당연히 경제학의 자취가 남아있을 게 분명하다. 단군신화에도 백성들의 경제문제에 대한 고민이 깃들여 있고, 신분제는 사회적 이유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파생된 제도이며, 아인슈타인조차 실업 문제로 고민했다. 또 빌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무료에서 돈을 주고 사는 경제재로 바꾸어 세계 최고의 부자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처럼 경제학의 쓸모와 인문학의 사유가 곳곳에 깃든 여러 이야기를 통해 경제 교양을 업그레이드해보자. 자신도 모르게 경제학의 실제적인 쓸모를 느끼고 생각의 시선을 바꾸는 경험이 될 것이다.



제1장 돈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돈이 개인의 삶과 국가 존립 여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유

제2장 경제학적 통찰로 역사를 읽는다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본 역사적인 행위들

제3장 예술을 이해하는 데도 경제학은 유용한 도구다

예술 속에 숨은 인간의 욕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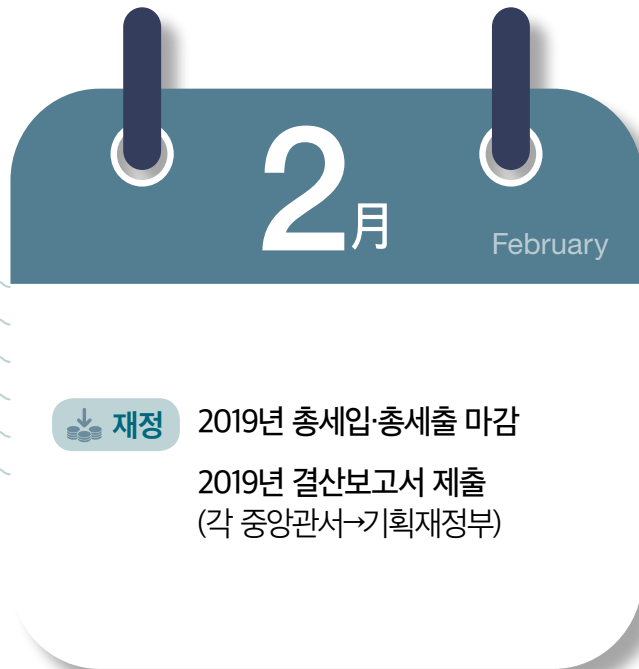
제4장 사람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이유

제5장 사회 변화는 경제적으로 움직인다

동서양을 막론한 경제원리의 역사

Financial Calendar



January 01

- 재정**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경제**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 재정** 2019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19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March 03

- 재정**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각 중앙관서)
- 경제** 한국은행 2019년 4/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 경제** 기획재정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 국제** IMF 수정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

August 08

- 인구** 통계청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 재정** 2021년 예산안 제출(정부→국회)
2021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경제** 한국은행 2/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020

□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집중접수 개시(1.14.)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1.15.부터 2.28.까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 집중접수 개시

□ 통계청 2019년 연간 고용동향 발표(1.15.)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은 66.8%로 전년 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하고 취업자는 2,712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30만 1천명 증가

□ 국제통화기금(IMF) 수정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발표(1.20.)

- 2020년(3.3%), 2021년(3.4%) 세계경제 성장률은 전년(2019년 2.9%) 대비 상승하였으나, 2019년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대비 일부 신흥국(특히 인도) 실적 저조 등을 반영하여 성장전망 하향 조정

□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2.10.)

-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결과, 총세입은 402.0조원, 총세출은 397.3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4.7조원이며, 이월 2.6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1조원 기록.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 제출 예정

April

04

- 재정** 2019년 결산감사 의뢰 (기획재정부→감사원)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 재정** 2021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기획재정부)
- 2019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국회)
- 2019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19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June

06

- 경제** 한국은행 1/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October

10

- 재정** 국유재산/물품 결산지침 확정
- 국제**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 재정** 2021년 예산안 국회 심의·의결
- 국제** OECD 경제전망보고서 (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 재정** 2021년 예산 확정
- 경제**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한국은행 3/4분기 국민계정(잠정) 발표

2020년 정부의 재정사업설명자료를 One-Stop으로 제공해 드려요!!

- 열린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 통합공개 -



예산이란 흔히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즉, 일정 기간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예산을 이해한다는 것은 해당 정부의 재정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정책으로 통합되어 표현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그 정책의 이유이자 주인인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고자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구조의 복잡성 및 공개의 제한성

세출 예산은 정부가 하는 일(기능)을 8천 여 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조화하고 각 세부사업별 예산을 그 성격(인건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제적 성질)에 따라 목-세목으로 분류하여 편성합니다. 더욱이 최근까지의 예산정보 공개 수준은 상세 구조인 세부사업-세목 레벨이 아닌 단위사업-목의 상위 구조로 합산된 예산액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구조의 방대함과 복잡함에 더한 제한적 정보 공개 수준으로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라기는 힘든 실정이었습니다.

* 2020년 본 예산 기준 세부사업 수

공개 수준 개선 및 사업별 사업설명자료 제공

이에 2017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중앙관서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예산 및 기금의 운용상황과 사업별 사업설명자료를 개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 정보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해 전체 예산, 기금의 일별 운용상황 정보와 사업별 사업설명 자료를 통합 공개하여 One-Stop으로 모든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예산 정보의 공개 수준도 세부사업-세목 수준으로 상세화하는 등 예산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하고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란?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에 편성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세부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처럼 세목별로 편성된 예산액 정보만 공개될 경우 국민은 사업명과 금액 외에 해당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아무런 추가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7개 필수 항목 및 추가 설명으로 구성된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공개됨에 따라 ① 사업총괄표(최근결산액, 예산액 등), ② 사업코드, ③ 사업지원형태, ④ 사업목적, ⑤ 사업근거, ⑥ 주요내용, ⑦ 사업집행절차 등 해당 사업의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이

가. 청소년 근로권익 보고

나. 국립 청소년 인터넷 드림마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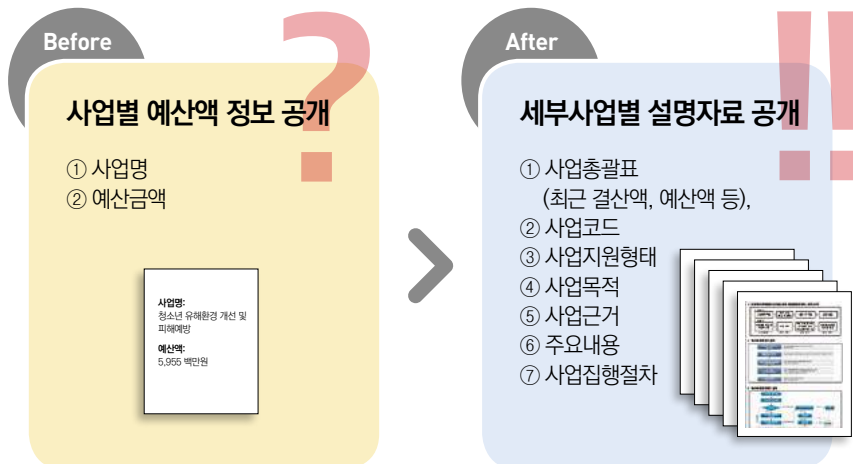
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운영

라.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마.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바. 청소년 가출 예방

의 세부 내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게되며 각 내역사업의 근거 및 목적, 추진 경위, 사업 추진 내용, 집행 절차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린재정 통합 공개 및 검색 편의 제공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는 <열린재정>의 재정통계 메뉴의 집행실적(일별/월별) 정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집행실적 조회 결과 화면에서 사업설명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세부사업명을 선택(클릭)하면 사업설명자료 원문을 조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보안 등의 이유로, 절차에 따라 비공개 결정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전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설명자료의 검색 편의 개선을 위해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업의 명칭만을 대상으로 검색하던 기존 기능을 개선하여 사업설명자료 파일에 기술된 내용까지 검색 대상으로 확대하고 그 검색 결과를 별도의 색인으로 제공하여 예산사업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대폭 개선한 것입니다.

2020년 예산에 대한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2월 중 공개될 예정이며 예산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삶에 플러스가 되는 **나라살림**,
열린재정에서 확인하세요!

열린재정



열린 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이란?

국가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입니다.



열린재정은,
일반 국민을 위한 알기 쉬운 정보,
전문 연구자를 위한 깊이 있는 상세 정보,
내게 맞는 정보를 찾아보는 맞춤형 정보 등
다양한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e나라도움 IT서비스 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 획득

e나라도움운영본부는 2020년 2월 6일(목) BSI(영국 표준협회)로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대상으로 IT서비스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인 "ISO/IEC 20000-1:2011(이하 ISO 20000)"을 취득했다. 인증서 수여식은 2월 6일 BSI그룹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재정정보원 관련 부서 임직원 및 영국표준협회(BSI) 총괄책임이 참석했다. ISO 2000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인하는 IT서비스의 운영/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인증이다. 영국표준협회는 e나라도움이 IT시스템에 대한 표준규격에 적합함을 인증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e나라도움이 국민들에게 안정적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증받게 되었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e나라도움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재정정보원-호서대SW중심대학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은 1월 17일(금) 호서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AI기반 창의인재 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호서대학교는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국대학 최초로 AI융합기반 SW중심대학으로 선정되어, AI융합대학과 SW중심대학사업단을 양축으로 대학 전체를 AI·SW 융합체제로 특화했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기술경쟁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신 IT 신기술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산업을 주도할 융합형 인재양성, 산학협력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국가보조금통합시스템 등 국가재정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부족한 현장실습 기회와 맞춤형 취업 컨설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실무형 IT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유기적인 산학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형 SW 인재양성이란 공통의 사회적가치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애독자 QUIZ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이메일】 narajaejung@kpfis.or.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2020. 2. 27. ~ 2020. 3. 13.

문 제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고자 할때,
국유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국유재산정보포털의 이름은?

1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퀴즈 정답

512.3조원

☆ 상품 당첨자

est*****@hanmail.net
cho*****@daum.net
ysw*****@naver.com
gus**@hanmail.net
gnp****@naver.com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트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CARD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중점적인 운용방향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와 국가 채무를 비교할 수 있어서 재정이
튼튼하게 잘 굴러가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숫자로 보기 코너도 한눈에 쏙 들어와서 유익했습니다.

gnp****

※ 〈월간 나라재정〉의 개인구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arajaejung@kpfis.or.kr로 메일 주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국가 재정의 밝은 내일을 위해
재정정보화를 이끌어갑니다.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273-05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